

**01** 정치와 법

본문 12~17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①	07 ④	08 ②
<b>수능 실전 문제</b>	1 ③	2 ②	3 ①	4 ⑤
	5 ②	6 ⑤	7 ⑤	8 ④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본문 21~25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④	02 ③	03 ②	04 ①
	05 ①	06 ③	07 ⑤	08 ①
<b>수능 실전 문제</b>	1 ①	2 ⑤	3 ④	4 ③
	5 ②	6 ④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본문 30~37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⑤	02 ③	03 ①	04 ④
	05 ⑤	06 ①	07 ④	08 ②
<b>수능 실전 문제</b>	1 ⑤	2 ②	3 ①	4 ③
	5 ④	6 ①	7 ③	8 ②
<b>I단원 기출 플러스</b>	01 ③	02 ①	03 ④	04 ①

**04** 정부 형태

본문 43~46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④	02 ②	03 ②	04 ⑤
<b>수능 실전 문제</b>	1 ④	2 ②	3 ⑤	4 ②
	5 ②	6 ④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본문 52~57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②	06 ⑤	07 ④	08 ⑤
<b>수능 실전 문제</b>	1 ④	2 ⑤	3 ⑤	4 ②
	5 ③	6 ④	7 ③	8 ②

**06** 지방 자치

본문 61~65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④	02 ①	03 ②	04 ③
<b>수능 실전 문제</b>	1 ⑤	2 ③	3 ③	4 ⑤
<b>II단원 기출 플러스</b>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7** 선거와 선거 제도

본문 72~77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④	06 ②	07 ⑤	08 ③
<b>수능 실전 문제</b>	1 ④	2 ①	3 ④	4 ④
	5 ③	6 ④	7 ①	8 ⑤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본문 83~89쪽

<b>수능 기본 문제</b>	01 ②	02 ①	03 ⑤	04 ③
<b>수능 실전 문제</b>	1 ④	2 ①	3 ④	4 ③
	5 ④	6 ②	7 ④	8 ②
<b>III단원 기출 플러스</b>	01 ②	02 ④	03 ①	04 ③

## 09

### 민법의 기초

본문 95~99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①	06 ③	07 ④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②	3 ③	4 ②
	5 ④	6 ⑤		

## 13

###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본문 142~14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③	07 ②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④	3 ③	4 ②
	5 ③	6 ②	7 ⑤	8 ②

## 10

### 재산 관계와 법

본문 105~110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④	03 ②	04 ②
	05 ②	06 ④	07 ⑤	08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②	3 ③	4 ②
	5 ②	6 ④	7 ③	8 ③

## 14

### 근로자의 권리

본문 151~15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 ⑤	08 ⑤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④	3 ①	4 ⑤
	5 ③	6 ⑤		
V단원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③	03 ③ 04 ⑤

## 11

### 가족 관계와 법

본문 116~123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①	07 ④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⑤	3 ⑤	4 ③
	5 ④	6 ④	7 ②	8 ⑤
IV단원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⑤	03 ① 04 ⑤

## 15

### 국제 관계와 국제법

본문 164~16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③	03 ②	04 ②
	1 ⑤	2 ③	3 ⑤	4 ②
5 ②	6 ②			

## 12

### 형법의 이해

본문 131~136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⑤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7 ③	08 ③
수능 실전 문제	1 ⑤	2 ③	3 ④	4 ⑤
	5 ③	6 ⑤	7 ③	8 ⑤

## 16

###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본문 171~17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②	03 ②	04 ⑤
	1 ⑤	2 ②	3 ④	4 ②
V단원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④	03 ④ 04 ③

## 01 정치와 법

###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2~13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①	07 ④	08 ②

### 0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정치는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조정 활동이라고 보는 넓은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치는 국가만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의회의 법률안 의결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는 국가만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③ 정치의 주체는 소수 통치 엘리트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활동을 정치로 본다.

### 02 법의 이념 이해

**문제 분석** 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는 것은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정의이다.

**정답 찾기** ①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오답 피하기** ②, ③ 법이 쉽게 폐지되거나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국민은 법을 믿고 안정된 법률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의 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④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모르면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더라도 구제가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정의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⑤ 법은 강제력이 있어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정의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 03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 지역에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

에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관할 구청이 주민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의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지역 주민들은 주변 환경의 낙후를 우려하여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 이에 관할 구청이 나서서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운영 방식, 소음 및 오폐수 방지 대책,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주민 대표들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공동체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이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공권력의 행사로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이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④ 제시된 사례에서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아 시민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배출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이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 04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근대에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률의 형식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나 목적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법이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⑤ 법치주의는 국가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식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은 상관없이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법의 절차적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이다.

③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다.

### 05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A법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불공정하므로 이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을은 A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의 관점은 실질적 법치주의, 을의 관점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ㄴ. 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ㄷ. 갑은 A법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함께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ㄱ.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말한다. 즉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ㄷ. 위헌 법률 심사제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형식적 법치주의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 06 근대 시민 혁명의 이해

**문제 분석** 근대 시민 혁명은 근대 초기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크게 성장한 시민 계급이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 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 운동이었다.

**정답 찾기** ①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인한 권리 장전이 승인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근대 시민 혁명은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자, 농민, 여성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③ 근대 시민 혁명으로 시민들이 참정권을 얻었지만,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은 여전히 참정권을 갖지 못했다. 모든 성인 남녀가 참정권을 갖게 된 보통 선거 제도는 현대 민주 정치에 와서야 확립되었다.

④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고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는 거리가 멀다.

⑤ 중우 정치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은 직접 민주 정치이다.

## 07 사회 계약설의 이해

**문제 분석**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고,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본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다. 따라서 A는 홉스, B는 루소, C는 로크이다.

**정답 찾기** ㄴ. 루소는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인 일

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홉스는 계약을 맺어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실정법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오답 피하기** ㄱ. 홉스는 통치자인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은 군주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본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와 루소이다.

ㄷ. 로크는 개인이 국가에 자신의 자연권을 일부 위임하였으므로 국가가 개인의 자연권 보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 권력이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08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이해

**문제 분석**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국민의 뜻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치주의를 통해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② 국민의 여론은 변화를 바라지만 기존의 법집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는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이곳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존하게 된다.

**오답 피하기** ①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법을 제정하다 보면 잘못된 여론에 의해 정의롭지 않은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③ 법 제정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해도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정착되기 어렵다.

④ 법을 자주 바꿀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중 어느 한 가지를 우선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면서 공존해야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된다.

### 수능 실전 문제

분문 14~17쪽

- |     |     |     |     |
|-----|-----|-----|-----|
| 1 ③ | 2 ② | 3 ① | 4 ⑤ |
| 5 ② | 6 ⑤ | 7 ⑤ | 8 ④ |

##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같은 국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노사 협상과 같은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활동도 정치로 보기 때문에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비해 을은 국가의 활동만 정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정답 찾기**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집단도 정치 활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정치 과정 참여 주체가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만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활동만 정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국가의 정치 활동으로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에서 정치 현상으로 이해한다.

⑤ 정치 활동을 소수 통치 엘리트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다.

## 2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부모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자녀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나타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민법의 상속 규정이다.

**정답 찾기** ② 부모 사망 시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만들어진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녀들은 다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즉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사례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제시된 사례에서 권력의 감시, 공권력 행사의 견제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정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⑤ 제시된 사례에서 구성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 3 법의 이념 이해

**문제 분석** 팀장 A는 회사로부터 받은 격려금 1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직원 갑과 을에게 물어보았다. 갑은 100만 원을 개별 성과에 상관없이 팀원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을은 개별적인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정답 찾기** ㄱ. 갑의 입장은 격려금을 개별적인 성과와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로 분배하자는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ㄴ. 을의 입장은 개별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액수를 달리 지급하자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 즉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차별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ㄷ. 갑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액수를 주는 절대적 평등의 관점을 갖고 있다. 반면 을은 개별적인 성과를 고려하는 상대적 평등의 관점을 갖고 있다.

ㄹ.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분배하는 방식이므로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다. 따라서 갑이 아닌 을의 주장과 관련된다.

## 4 법치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보장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갑이 2점을 얻었으므로 갑의 답안은 모두 옳은 것이다. 따라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⑤ 갑은 2점, 을은 1점을 얻었으므로 ㉠에는 옳은 내용, ㉡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법이 통치자의 권한 남용의 도구가 되기 쉬운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므로 해당 내용은 ㉡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의 지배를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인정한다.

② 히틀러가 만든 나치스 정권의 수권법은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행정부에 의한 합법적 독재가 가능한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은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이라도 그 내용이 정의로워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입법의 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④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하기 위해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즉 해당 내용은 실질적 법치주의만의 특징이 아니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 5 차티스트 운동의 의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차티스트 운동 당시의 인민헌장이다. 차티스트 운동은 근대 시민 사회의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 계급이 주도한 참정권 확대 운동이다.

**정답 찾기** ㄱ.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에서 연령 등에 따라 선거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ㄷ.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에서 연령

등에 따라 참정권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원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을 없애라.’는 요구에서 당시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티스트 운동 당시 영국에서는 연령, 재산 등을 이유로 참정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나. 하원 의원 출마자, 비밀 투표, 선거구 문제 등이 언급된 것을 통해 차티스트 운동 당시 공직자는 윤번제나 추천제가 아닌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ㄹ. 인민헌장 요구 사항에서 개인주의의 심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무관심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 6 근대 인권 선언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미국 독립 선언, (나)는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 미국 독립 선언은 영국의 부당한 식민 지배에 대항하였던 미국 독립 혁명의 결과 나온 인권 선언으로서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국민은 그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봉건적인 신분 제도로 인해 만들어진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의 결과 나온 인권 선언으로서 자유와 평등 같은 인간의 천부적 권리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정답 찾기** ⑤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은 모두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나타난 인권 선언이다. 근대 시민 혁명은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낡고 모순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계몽사상과,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 사람들 간의 계약으로 형성되었다는 사회 계약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오답 피하기** ①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인한 선언은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 나타난 권리 장전이다.

②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누구에게나 정치적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성별, 재산 등에 따라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③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 모두에서 직접 민주 정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미국 독립 선언과 프랑스 인권 선언은 모두 저항권이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 7 사회 계약설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고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해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옹호한 홉스, 을은 계약을 통해 국가에 자연권을 일부 위임하였지만 계약을 위반하면 개인이 통치자를 부정할 권리(저항권)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한 로크이다.

**정답 찾기** ⑤ 홉스와 로크 등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홉스는 통치자인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② 로크는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하므로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반면 홉스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복종 계약에 동의했으므로 통치자의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홉스는 통치자의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로크는 통치자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기존의 통치 권력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로크는 대표자에 의한 간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 사람은 루소이다.

## 8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

**문제 분석**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아테네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근대 민주 정치는 근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나타났다.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시민은 정치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였다. 근대 시민 사회의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 여성 등은 참정권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덕분에 현대에 들어와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정답 찾기** ④ B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라면, A와 C는 각각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는 모두 대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은 현대 민주 정치만의 특징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직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한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계몽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이다. 따라서 B는 근대 민주 정치이고, A와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절대 왕정을 타도하며 등장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⑤ C가 현대 민주 정치라면, A와 B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근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성별, 재산, 신분 등에 따라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입헌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공통된 특징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수능 기본 문제

본문 21~22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①
05 ①	06 ③	07 ⑤	08 ①

### 01 헌법의 의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데, 만일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지방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한다. 만일 대법원이 해당 조례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하면 그 조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찾기** ④ 법률은 헌법의 하위 법규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는 헌법이나 법률의 하위 법규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 조항과 조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를 통해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내용에서 헌법의 사회 통합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제시된 내용에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헌법은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 조직의 정당성이 헌법에 근거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에서 이러한 헌법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헌법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가 창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 02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해당 제품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광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 광고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 광고를 행정 기관에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답 찾기** ③ 헌법 재판소는 행정 기관이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가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제시된 사례에서 헌법이 국가 권력 조직의 정당성 근거로 작용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제시된 사례에서 국가 권력 기관 간 견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제시된 사례에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3 헌법의 의미 변천 이해

**문제 분석** 사회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따라서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정답 찾기** ㄱ.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해당한다.

ㄷ. 국가의 통치 조직과 권한 및 상호 관계 등은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ㄴ. 권력 분립, 국민 주권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다.

ㄹ.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이 등장 배경인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04 국민 주권주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다는 내용을 통해 제시문은 국민 주권주의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ㄴ.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원리이다. 또한 선거나 국민 투표 등을 통해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ㄷ.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ㄹ.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복수 정당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 존중, 침략적 전쟁 부인은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 0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가)에서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로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나)에서 사전 투표 제도는 공직 선거에서 선거 당일 투

표하기 어려운 사람이 선거일 이전 일정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생활에 개입하여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답 피하기** ②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된 원리이다. 국민 주권주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④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⑤ 최저 임금제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 06 자유 민주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인 A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유지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고 국가가 최대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자유주의가 결합한 이념이다.

**정답 찾기** ③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복수 정당제,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이 자유 민주주의에 어긋날 경우 해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평화 통일 지향, ②, ④는 복지 국가의 원리, ⑤는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헌법 규정이다.

## 07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가)는 국제 평화주의, (나)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이다.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답 찾기** ⑤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 진흥, 무상 의무 교육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장한다.

②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④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 0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법 절차의 원리, 신체의 자유 보장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정답 찾기** ㄱ. 여성 및 연소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이들의 근로를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ㄴ.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시하며,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ㄷ. 자유 민주주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지만,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ㄹ. (가)에는 자유 민주주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3~25쪽

- |     |     |     |     |
|-----|-----|-----|-----|
| 1 ① | 2 ⑤ | 3 ④ | 4 ③ |
| 5 ② | 6 ④ |     |     |

## 1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도의 조례는 독서실에서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공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례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 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두 사례 모두에서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각각 해당 조례와 법률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정답 찾기** ① 대법원은 ○○도의 해당 조례 조항이 독서실에서 남녀가 한 공간에서 함께 공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직업 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중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은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이다. 이를 통해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하위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 준다.

**오답 피하기** ② 제시된 사례에서 헌법이 국가 권력 창출과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도의 조례 조항과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대법원의 ○○도의 조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과 헌법 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해당 조항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⑤ 제시된 사례에서는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가 권력의 제한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 2 헌법의 의미 변천 이해

**문제 분석** 사회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자유권 보장, 권력 분립, 국민 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따라서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C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정답 찾기** ⑤ 어느 시대의 헌법이든지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 관계 및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국가 통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모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은 조선 통치 질서의 기본을 확립한 법전으로서 국민의 자유권이나 사회권 등을 강조한 것은 아니므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②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해당한다.

③ 실질적 평등의 실현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관련되므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보다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추구한다.

④ 헌법의 최고 규범성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은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시각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헌법 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함(封緘)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에 부각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나)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복수 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사유 재산제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②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다.

③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조항은 문화 국가의 원리의 근거 조항 중 하나이다.

⑤ (가)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복지 국가의 원리이지만, (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자유 민주주의이다.

##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기초 연금, 노동 3권, 최저 임금 등은 모두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과 관련된다. 정당의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주민 투표 연령 인하, 집회의 자유 등은 모두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안과 관련된다. 따라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 찾기** 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등장 이후 개인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국가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ㄷ.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즉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찾는다.

**오답 피하기** ㄱ.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 중시와는 관련이 적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생활에 개입해야 하므로 국가 권력 행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 5 국민 주권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과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를 거쳐서 개정되었다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 창출의 근원이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헌법 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 찾기** ㄱ.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춘 것이 적절한지는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토론 주제에 부합한다.

ㄹ.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의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국회 의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바람직한지는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토론 주제에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ㄴ. 국가가 여행 금지 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는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국민 주권주의보다는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 토론 주제이다.

ㄷ. 미취업 청년에게 국가가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토론 주제이다.

### 6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아동 양육 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 등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받고 있는 정착금과 자립 수당으로는 기본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가 인권 위원회는 관련 국가 기관에 이들의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답 찾기** ④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의 원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②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③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⑤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수능 기본 문제

본문 30~31쪽

- |      |      |      |      |
|------|------|------|------|
| 01 ⑤ | 02 ③ | 03 ① | 04 ④ |
| 05 ⑤ | 06 ① | 07 ④ | 08 ② |

### 01 자유권의 이해

**문제 분석** ‘위급 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 활동 지침’은 집주인 등 주거 점유자가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집주인 등 주거 점유자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입을 배제하는 권리로서 기본권 유형 중 자유권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서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자유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④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것은 사회권이다.

### 0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이해

**문제 분석** 피의자 갑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수갑 찬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자신의 인격을 침해당하고 수치심 등을 느꼈다. 이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밑줄 친 ㉠은 인격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③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권이다.

②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은 참정권이다.

⑤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03 청구권과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형사 보상 청구권에 대한 조항으로서 청구권에 해당하고, (나)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 최저 임금제에 대한 조항으로서 사회권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①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하였다.

③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소극적·방어적인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④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된다.

⑤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 04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다.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단서에서 A~D는 각각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고, 교사의 평가에서 세 사람은 옳게 설명하였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설명해야 할 기본권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을 설명했다고 했으므로 A는 청구권, B는 평등권, C는 자유권, D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④ D는 사회권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하였지만 빈부 격차 심화,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권이 등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종류의 서로 다른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③ 자유권은 근대 시민 혁명으로 등장한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⑤ 정은 사회권의 특징을 설명해야 했는데, 참정권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 05 사회권의 이해

**문제 분석** 최저 임금, 의료 급여, 단체 교섭 등은 모두 사회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갑~병이 공통적으로 행사한 기본권 유형은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ㄷ.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ㄹ.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의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ㄱ. 사회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권리이다. 소극적·방어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권이다.

ㄴ. 사회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헌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 06 기본권의 유형과 제한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이며,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따라서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 사유(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해당되어야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7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집회와 시위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크므로 집회와 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을은 집회와 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다. (가)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의 한계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④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지만, 아예 금지할 경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영업을 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그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②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가능하다.

- ③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 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폭력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08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해

**문제 분석** 정치 자금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정치 자금 관련 회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② 헌법 재판소는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이 정치 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 부담의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청구인의 알 권리)이 너무 커서 법익의 균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했다.

**오답 피하기** ① 정치 자금 관련 회계 자료의 열람 공개를 제한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제시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헌법 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어서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 ④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정치 자금법상 회계 보고된 자료의 열람 기간을 제한한 것은 정치 자금법이라는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2~35쪽

- |     |     |     |     |
|-----|-----|-----|-----|
| 1 ㉠ | 2 ㉡ | 3 ㉠ | 4 ㉢ |
| 5 ㉣ | 6 ㉠ | 7 ㉢ | 8 ㉡ |

### 1 기본권 유형의 이해

**문제 분석**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A는 자유권이고, B와 C는 각각 사회권과 청구권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B는 사회권, C는 청구권이므로 ㉠은 '예', ㉡은 '아니요'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이므로 ㉠, ㉡은 모두 '아니요'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은 '아니요'이다.

- ②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 ③ 청원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B가 청구권이면 C는 사

회권이 된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 ④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 2 평등권의 이해

**문제 분석** 을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동조합 위원장인 갑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을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의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정답 찾기** ②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 ③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④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 ⑤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 3 참정권과 평등권의 이해

**문제 분석** 공직 선거법에는 점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갑은 이 규정으로 기본권 A와 B를 침해받았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 재판소는 이 규정이 기본권 A와 B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는 선호 후보를 결정하는 등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선거 정보를 획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므로 참정권이다. B는 비장애인에 비해 시각 장애인의 선거 정보 획득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평등권이다.

**정답 찾기** ①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③ 참정권과 평등권은 모두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④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보장되지만, 평등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된다.
- ⑤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지만, 특별한 경우(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 4 기본권 유형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는 사회권과 청구권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빈부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ㄴ.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A가 청구권이라면, ㉠은 '예'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청구권이 아니라 사회권이므로 ㉡에 들어갈 대답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과 ㉡에 들어갈 대답은 같지 않다.

ㄷ. 소극적·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므로 B가 자유권, A와 C는 각각 사회권과 청구권 중 하나이다.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므로 ㉢은 '예'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은 '아니요'이다.

**오답 피하기** ㄱ.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사회권과 청구권이므로 ㉠~㉣ 중에서 2개가 '예'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 중 1개만 '예'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대답 중 '예'는 3개이다.

ㄴ. 사회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 ㉡이 모두 '아니요'가 될 수는 없다. ㉠, ㉡, ㉣이 모두 '예'라면,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이 된다.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5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해

**문제 분석** 아동 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이나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 조항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 등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며 위헌 결정을 하였다.

**정답 찾기** ㄴ. 헌법 재판소는 아동 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었음을 확인했다.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를 판단했으므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ㄷ.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까지 오랜 기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ㄱ. 같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같이 행사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방어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ㄷ.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이나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 6 참정권 제한의 한계 이해

**문제 분석** 공직 선거법 제264조에서는 당선인이 공직 선거법이

나 정치 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ㄱ. 같은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당선인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당선 무효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즉 당선 무효는 기본권 제한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므로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기준인 수단의 적합성을 준수했다고 본다. ㄴ. 을은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당선 무효를 시키는 규정은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ㄷ. 갑과 을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을은 해당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의 주장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은 공무 담임권으로서 참정권에 해당한다. 참정권은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진 권리는 자유권이다.

## 7 기본권 제한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출국 금지로 인해 얻는 공익이 피고인이 입게 되는 사익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답 찾기** ③ 헌법 재판소는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로 얻는 공익은 국가 형벌권 확보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지만,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출국이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기준인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밑줄 친 부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국가 형벌권 확보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지만, 밑줄 친 부분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보다는 법익의 균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제시문에서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 8 기본권 제한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구 도로 교통법 제15조 제3항은 전용 차로제를 규정하

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갑은 이 조항이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헌법 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정답 찾기** ②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 전용 차로제는 구 도로 교통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는 전용 차로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이므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③ 헌법 재판소는 구 도로 교통법 해당 조항은 전용 차로제를 시행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행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피해의 최소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④ 헌법 재판소는 구 도로 교통법 해당 조항에 따른 전용 차로제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라는 공익이 승용차 운전자의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⑤ 헌법 재판소는 전용 차로제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I 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36~37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①

0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오답 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민 단체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정치로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 사회 집단이 이해 관계를 조정하거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따라서 (가)에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회의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

0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실제적 내용이 아닌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해 입법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오답 피하기** ② 법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0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국제 평화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④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재외 국민의 선거권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들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 ③ 복지 국가의 원리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⑤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 04 기본권의 유형 이해

- 문제 분석** (가), (나), (다) 각각에 규정된 기본권은 순서대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이다.
- 정답 찾기** ①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 오답 피하기** ②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③ 사회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 ⑤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 04 정부 형태

수능 기본 문제

본문 43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⑤

### 01 대통령제의 특징 이해

- 문제 분석**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삼권 분립의 원리가 실현되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독립성과 견제가 중시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 정답 찾기**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가 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 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02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이해

- 문제 분석** 의회에서 총리를 지명하고,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대해 의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 정답 찾기** 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인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한다.
- 오답 피하기** 나.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 03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 문제 분석** 그림과 같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며,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정답 찾기**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①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것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 요소이다.
- ③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 ④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⑤ 국회 의원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 요소이다.

#### 04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정국 이해

**문제 분석** A당이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인 60%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B당에 행정부 수반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갑국은 대통령제이다.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인 B당의 의회 의석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갑국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곤란하다.

-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44~46쪽
1 ④	2 ②	3 ⑤
5 ②	6 ④	4 ②

#### 1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은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며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국은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가 보장되므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  
 ②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  
 ③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에서는 모두 의회 의원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갖는다.

#### 2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A만의 특징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틀린 내용이 1개 있다고 했고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틀린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제의 특징이 틀린 내용이 된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이며,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 들어가

야 한다. A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B는 대통령제이다. B만의 특징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제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틀린 내용이 2개 있다고 했으므로 (나)에는 대통령제의 특징이 들어갈 수 없다.

**정답 찾기** ㄱ. A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B는 대통령제이므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ㄷ.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3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B는 대통령제이다.

**정답 찾기** ⑤ (가)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A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에는 ‘예’가 들어간다. (나)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B는 대통령제이므로 ㉡에는 ‘예’가 들어간다. 따라서 ㉠과 ㉡에 들어갈 답변은 동일하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으므로 ㉠에 들어갈 답변은 ‘아니요’이다.

②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 ‘예’라고 답변해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가)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에는 ‘예’가 들어가므로 ㉠과 ㉡에 들어갈 답변은 동일하지 않다.

④ (나)에 ‘의회 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가?’가 들어가면, ㉠과 ㉡에는 모두 ‘예’가 들어간다.

#### 4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카드의 내용이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는 A, C, D, H를 가져가면 각각 2점을 획득한다. 카드의 내용이 대통령제의 요소에 해당하는 B, E, F, G, I를 가져가면 각각 1점을 획득한다.

**정답 찾기** ㄱ. 갑의 점수는 5점으로 되어 있는데, 1점짜리 카드 B와 2점짜리 카드 H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점수는 3점이다. 따라서 5점이 되기 위해서는 ㉠에는 2점짜리 카드 C 또는 카드 D가 들어가야 한다.

ㄴ. 병은 1점짜리 카드 E와 G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점수는 2점이다. ㉡이 4점이라면, ㉡에 2점짜리 카드가 들어가야 하므로 1점짜리 카드 I는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ㄴ. 병은 1점짜리 카드 E와 G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점수는 2점이다. ㉡에 2점짜리 카드가 들어가더라도 ㉡은 최대

4점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㉔은 5점 이상이 될 수 없다.

ㄷ. ㉑에 카드 C, ㉒에 카드 I가 들어가면, ㉓에는 카드 D만 들어갈 수 있다. 카드 D는 2점이므로 ㉓은 4점이 된다.

### 5 정부 형태에 따른 정치 상황 이해

**문제 분석**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인 여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경우를 여대야소라고 하고, 여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한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단독 내각이 수립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립 내각이 수립된다. A국은 대통령제이고 여대야소가 나타나고 있다. B국은 대통령제이고 여소야대가 나타나고 있다. C국은 의원 내각제이고 단독 내각이 수립되었다. D국은 의원 내각제이고 연립 내각이 수립되었다.

**정답 찾기** ㉑ A국은 여대야소 상황으로 여당이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므로 여소야대인 B국에 비해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 가능성이 용이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㉑ C국은 의원 내각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㉑ B국은 대통령제이므로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㉒ D국은 연립 내각이 수립된 의원 내각제 국가이므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없다.
- ㉓ B국은 대통령제이므로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없다.

### 6 정부 형태의 변화 파악

**문제 분석** t 시기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㉑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A당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t+1 시기, t+3 시기와 같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이 단독 내각을 수립하고, t+2 시기, t+4 시기와 같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연립 내각이 수립된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석의 분포만으로는 여당을 파악할 수 없다. t+1 시기~t+4 시기에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다는 단서에 따라 t+1 시기~t+4 시기의 정부 형태는 아래와 같이 (가)~(바)의 6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구분	t 시기	t+1 시기	t+2 시기	t+3 시기	t+4 시기
(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나)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다)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라)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마)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정답 찾기** ㄴ. ㉑은 A당이고, ㉑과 ㉒이 같다고 했으므로 ㉓도

A당이다. 이는 t+1 시기에 B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이 소속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t+1 시기에 대통령제로 정부 형태가 변화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t+2 시기에 내각의 의회 해산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t+2 시기에 정부 형태가 다시 의원 내각제로 변화한 것이다. t+1 시기~t+4 시기에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t+2 시기 이후에는 정부 형태의 변화 없이 계속 의원 내각제를 유지한 것이다. 위 표에서 (가)의 경우이다.

ㄷ. t+1 시기와 t+3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면 t+1 시기와 t+3 시기는 모두 의원 내각제라는 뜻이다. t+1 시기~t+4 시기에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다는 단서에 따라 t+2 시기에 대통령제로, t+3 시기에 다시 의원 내각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2 시기는 대통령제이므로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선출한다. 위 표에서 (라)의 경우이다.

**오답 피하기** ㄴ. t 시기가 의원 내각제이고, 이후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으므로 t+4 시기는 반드시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t+4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위 표에서 (가)~(바) 모두 해당된다.

ㄷ. ㉑이 B당이라면 t+3 시기는 대통령제이다. t+2 시기에 의회 의원과 내각이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의원 내각제이다. t+1 시기~t+4 시기에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다는 단서에 따라 t+1 시기는 대통령제가 될 수 없으므로 의원 내각제이다. t+1 시기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A당은 ㉒에 들어갈 수 없다. 위 표에서 (바)의 경우이다.

##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수능 기본 문제

본문 52~53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②	06 ⑤	07 ④	08 ⑤

### 01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문제 분석** ㉠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은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 ㉢은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다.

**정답 찾기** ④ 국회는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② 국정 조사 및 국정 감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 ③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 ⑤ 국가 예산 결산 심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 02 국회의 조직과 운영 이해

**문제 분석** 국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된다.

**오답 피하기** ① 국회 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중임 제한이 없다.

- ② 위원회는 특별 위원회와 상임 위원회가 있으며,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사한다.
- ③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는 교섭 단체는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 ④ 정기회는 100일 이내의 회기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 03 법률 제·개정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국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정답 찾기** ① 법률안 제출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나 국회 위원회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국회 의장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없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 ③ 상임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것은 교섭 단체이다.
- ④ 법률안 개정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 04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문제 분석** ㉠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정답 찾기** ㉠.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사법부)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국정 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국정 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국정 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 05 행정부 권한 행사의 견제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막강하고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양한 통제 수단이 존재한다.

**정답 찾기** ㉠. 국정 감사는 국회 정기회 때에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하는 것으로 국회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 고위직 행정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탄핵 소추는 국회에 의한 통제,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국회의 사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 06 심급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항소, B는 2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등 법원, C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고, D는 상고 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하는 대법원이다.

**정답 찾기** ⑤ 모든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단,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1심 판결은 유죄 판결일 것이다.

- 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항소이다.
- ③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고이다.

④ 고등 법원과 대법원 모두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을 할 수 있다.

### 07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다.

**정답 찾기** ④ 헌법 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정당 해산을 심판한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탄핵 심판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개시된다.

⑤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08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국무총리, B는 대통령, C는 감사원, D는 국회이다.

**정답 찾기** ⑤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는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②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b>수능 실전 문제</b>		본문 54~57쪽	
1 ④	2 ⑤	3 ⑤	4 ②
5 ③	6 ④	7 ③	8 ②

### 1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국정 조사, 을은 헌법 개정, 병은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④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된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정 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진다.

② 갑이 요구하는 국정 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진다. 국정 전반에 관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적인 감사는 국정 감사이다.

③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⑤ 국민 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2 대통령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은 행정부 지휘·감독권, 대외적인 국가 대표권(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국정 조정권, 헌법 기관 구성권 등을 갖는다.

**정답 찾기** ⑤ 각부 장관들과 달리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② 국무 회의에는 모든 장관이 소속되며,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③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모두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④ 주요한 조약에 대한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만, 국무 회의의 법률안 제출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 법률 제·개정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법률의 제·개정 절차는 법률안 제출, 국회 의장의 상임 위원회 회부,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위원회 및 정부, ㉡은 국회 의장, ㉢은 상임 위원회, ㉣은 본회의, ㉤은 대통령이다.

**정답 찾기** 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법률안 제출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위원회 및 정부가 할 수 있다.

② ㉡은 국회 의장이다.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국회의 기관은 상임 위원회이다.

③ ㉢은 상임 위원회이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구성하는 것은 교섭 단체이다.

④ 국회 의장은 상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문제 분석**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헌법 기관은 국회와 행정부이므로 '아니요'로 답한 A는 대법원이고, ㉠에 들어갈 대답은

‘예’이다. 구성원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대법원과 행정부이므로 ㉠에 들어갈 대답은 ‘예’이다. 따라서 A는 대법원, B는 행정부, C는 국회이다.

**정답 찾기** ㄱ.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ㄷ. (가)에 ‘구성원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는가?’가 들어가면, ㉡에 ‘아니요’가 들어가므로 ㉠에 들어갈 ‘예’와 서로 다른 대답이다.

**오답 피하기** ㄴ.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ㄹ. (가)에 ‘국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가?’가 들어가면, ㉡에 ‘아니요’가 들어가므로 ㉠에 들어갈 ‘예’와 서로 다른 대답이다.

### 5 심급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대법원, (나)는 고등 법원, (다)는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 ㉡은 상고 또는 재항고이고, ㉢, ㉣은 항소 또는 항고이다.

**정답 찾기** ③ 대법관은 일반 법관과 달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중대한 민·형사 사건, B는 경미한 민·형사 사건에 해당한다.

② 위헌 법률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④ ㉢은 ㉠과 달리 항고가 될 수 있다.

⑤ ㉣은 항소 또는 항고이므로 상고가 될 수 없다.

### 6 위헌 법률 심판의 이해

**문제 분석**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정답 찾기** ④ 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면,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모든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은 대법원이 아닐 수도 있다.

②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 재판 결과는 원칙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⑤ 법원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7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개정 절차는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 투표, 공포로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③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헌법 개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의 공포를 거부할 수 없다.

### 8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 국회, 대법원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ㄱ. (가)에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가?’가 들어가면, A는 대법원이다. (나)에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선출)되는가?’가 들어가면, B, C는 각각 대통령과 국회 중 하나이고, (다)에 ‘국가 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을 갖는가?’가 들어가면, B는 국회이다. 따라서 C는 대통령이 되므로 해당 질문은 각각 (나), (다)에 들어갈 수 있다.

ㄷ. C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있고, (나)에 ‘헌법 개정안 제안권이 있는가?’가 들어가면, C는 대통령이므로 B는 국회이다.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다)에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나)에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이 있는가?’가 들어가면, A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갖지 않는다. 국무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ㄷ. (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는가?’가 들어가면, A는 대법원이다. B가 국무 위원 해임권을 갖는다면, B는 대통령, C는 국회이다. 국회 의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06 지방 자치

수능 기본 문제

본문 6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③

### 01 주민 참여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가)에 나타난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은 제외)을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 소환제이다. (나)에 나타난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이다.

**정답 찾기** 나.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ㄷ. 주민 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가. 주민 소환제는 지방 자치 단체장의 행정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ㄴ. 주민 소환제와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모두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한다.

### 02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기관 이해

**문제 분석** ○○도지사는 광역 자치 단체장, △△시 의회는 기초 지방 의회, ◇◇광역시 의회는 광역 지방 의회, □□구청장은 기초 자치 단체장이다.

**정답 찾기** ① 광역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사무에 관해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오답 피하기** ② 지역의 각종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역할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결산 승인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④ 기초 지방 의회 의원 선거와 광역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

⑤ ㉞은 의결 기관, ㉟은 집행 기관이다.

### 03 지방 자치 단체의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정답 찾기** 가. 중앙 정부는 법령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는 자치를 통해 중앙 정부의 권

력 집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행사한다.

**오답 피하기** 나. 규칙 제정권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다.

ㄷ.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은 제외)과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04 주민 참여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주민 투표 제도, (나)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주민 발안 제도), (다)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이다.

**정답 찾기** ③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① 주민 투표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직원의 임면권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다.

②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례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다.

④ 주민 투표 제도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는 모두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에 해당한다.

⑤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모두 주민 자치에 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62~63쪽

1 ⑤

2 ③

3 ③

4 ⑤

### 1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 지역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찾기** ⑤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제도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시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 ③ 중앙 정부의 하향식 정책은 지역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시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 ④ 지역 발전의 수준은 지역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비례할 수 있지만, 제시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 2 지방 자치의 문제점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제약,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부족,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정답 찾기** ③ 주민 참여 관련 법규와 제도를 명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민의 참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 ②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 ④ 조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 ⑤ 지역 주민들이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가 주민 의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 3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기관 이해

-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로 구분된다. 또한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두고 각각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A는 기초 자치 단체장, B는 광역 의회가 된다.
- 정답 찾기** ③ 광역 의회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결 기관이다. 기초 자치 단체장은 기초 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 오답 피하기** ① 광역 자치 단체장과 기초 자치 단체장은 모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② 기초 의회와 광역 의회는 모두 비례 대표 의원이 존재한다.
- ④ 기초 자치 단체장과 광역 의회 의원(비례 대표 의원 제외)은 모두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 ⑤ 기초 자치 단체장은 집행 기관, 광역 의회는 의결 기관이다.

## 4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이해

- 문제 분석** 카드 A, D, E, G, I의 내용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므로 3장을 모을 경우 1점을 획득한다. 카드 B, C, F, H의 내용

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므로 3장을 모을 경우 2점을 획득한다. 갑이 가져간 카드 중에 카드 A, D의 내용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고, 카드 H의 내용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므로 카드 H 대신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카드를 받으면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카드 3장을 모아 1점을 얻을 수 있다. 을이 가져간 카드 중에 카드 B, C의 내용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고, 카드 G의 내용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므로 카드 G 대신에 지방 의회의 권한 카드를 받으면 지방 의회의 카드 3장을 모아 2점을 얻을 수 있다. 병이 가져간 카드 중에 카드 E, I의 내용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고, 카드 F의 내용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므로 카드 F 대신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 카드를 받으면 지방 자치 단체장 카드 3장을 모아 1점을 얻을 수 있다.

- 정답 찾기** 나. 갑은 카드 H를 제외한 나머지 2장이 지방 자치 단체장 카드이므로 카드 H를 이동시켰다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장 카드를 모으려는 의도이다. 병은 카드 F를 제외한 나머지 2장이 지방 자치 단체장 카드이므로, 카드 F를 이동시켰다는 것은 지방 자치 단체장 카드를 모으려는 의도이다.
- 다. 갑이 카드 F를 받고 카드 H를 이동시키고, 을이 카드 G를 이동시키면 병은 카드 F를 이동시킨 것이므로 을은 2점, 병은 1점을 얻어 게임이 종료되며, 을이 우승한다.

구분	갑	을	병
카드	A, D, F	B, C, H	E, G, I
점수	0점	2점	1점

르. 갑이 카드 D를, 을이 카드 G를, 병이 카드 E를 이동시켰다면, 아무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게임이 종료되지 않는다.

구분	갑	을	병
카드	A, H, E	B, C, D	F, G, I
점수	0점	0점	0점

- 오답 피하기** 가. 을이 카드 C를 이동시키고 카드 H를 받으면 을은 0점을 획득하므로 우승하지 못한다.

01 ⑤

02 ②

03 ⑤

04 ④

## 01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리된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갑국은 t 시기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B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내각이 수립되며, t+1 시기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A당의 단독 내각이 수립된다. 을국은 t 시기에 여당인 b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여대야소가 나타나고, t+1 시기에는 여당인 b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소야대가 나타난다.

**정답 찾기** ⑤ 을국은 t 시기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대야소가 나타나므로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했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갑국은 의원 내각제이므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하지 않는다.

② 대통령제인 을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인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의원 내각제인 갑국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대통령제인 을국에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

## 02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인 (가)는 위헌 법률 심판이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인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하는 A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②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에 따라 헌법 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오답 피하기** ①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은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 재판소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청구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단,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하는 법원의 견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다.

⑤ 헌법 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03 국가 기관별 권한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수 있는 국회이다.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므로 B는 대법원이다.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은 국무총리의 권한이므로 C는 국무총리이다.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D는 대통령이다.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므로 E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은 이 문서에 부서한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

② 일반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④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04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진 A는 지방 의회이고,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주민 조례 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이고,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정답 찾기**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주민 조례 발안 제도 개선과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신설 모두 주민 자치를 강화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② 조례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다.

③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 간에는 수평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수직적 권력 분립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에 나타난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의원 제외)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07 선거와 선거 제도

### 수능 기본 문제

본문 72~73쪽

- |      |      |      |      |
|------|------|------|------|
| 01 ① | 02 ③ | 03 ② | 04 ② |
| 05 ④ | 06 ② | 07 ⑤ | 08 ③ |

### 0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서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 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대표자 선출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제시문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정치권력 통제는 선거의 기능이지만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주권 의식 신장은 선거의 기능이지만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④ 정치 교육의 장(場) 제공은 선거의 기능이지만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⑤ 여론 형성 및 반영은 선거의 기능이지만 제시문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 02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뉴스에 민주 선거의 원칙에 위반된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가)를 통해 세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를 통해 세금 납부액에 따라 투표수가 다를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가)에서 세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위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세금 납부액에 따라 투표수가 다르다. 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투표의 수와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평등 선거의 원칙이 위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가)에서 평등 선거의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에서 비밀 선거의 원칙, 직접 선거의 원칙, 보통 선거의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03 소선거구제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국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 가~라에서 A당의 정당 득표율은 35%, 의석률은 4석 중 1석 확보로 25%이고, B당의 정당 득표율은 25%, 의석률은 4석 중 1석 확보로 25%이며, C당의 정당 득표율은 40%, 의석률은 4석 중 2석 확보로 50%이다.

**[정답 찾기]** 가. ○○국은 선거구 가~라에서 각각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 B당의 정당 득표율은 25%, 의석률은 25%로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한다.

**[오답 피하기]** 나. A당의 의석률은 25%, 정당 득표율은 35%로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낮아 과소 대표되었다.

르. C당의 의석률은 50%로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04 중·대선거구제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서 4개의 선거구에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하였으므로 중·대선거구제임을 알 수 있다.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표)

정당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				
가	25	20	10	45
나	60	25	10	5
다	15	30	50	5
라	40	15	20	25
구분	A당	B당	C당	D당
의석수(석)	3	2	1	2
의석률(%)	37.5	25	12.5	25
득표율(%)	35	22.5	22.5	20

**[정답 찾기]** ② 사표는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로 '가' 선거구에서는 30표, '나' 선거구에서는 15표, '다' 선거구에서는 20표, '라' 선거구에서는 35표이다. 따라서 '라' 선거구에서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B당의 의석수는 2석, D당의 의석수는 2석으로 B당과 D당이 얻은 의석수는 동일하다.

③ C당은 득표율 22.5%, 의석률 12.5%로 A당~D당 중에서 C당이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가장 크다.

④ 중·대선거구제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에 득표율이 달라서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⑤ '나' 선거구에서 A당은 60%의 득표율이므로 2명의 후보자가 공천되었을 경우 최대 2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 05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 분석]** △△국의 t대와 t+1대의 대통령 선거 결과, t대는 1차 투표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상위 1위와 2위 득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일정 비율 이상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였으며, t+1대는 후보자 중에

서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정답 찾기** ㄱ. t대는 1차 투표 결과 당선에 필요한 일정 득표율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없어서 2차 투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대에는 당선에 필요한 일정 득표율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ㄴ. t+1대에는 후보자 중에서 1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였다.

ㄷ. t대는 당선자가 52%의 득표율, t+1대는 당선자가 3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므로 t대는 t+1대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

**오답 피하기** ㄹ. t대는 2차 투표까지 투표를 2회 실시하였고, t+1대는 투표를 1회 실시하였다. 따라서 t대는 t+1대에 비해 선거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 06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 제시된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묻고 있다.

**정답 찾기** ㄱ. 선거 관리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ㄷ. 선거 공영제는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의 관리하에 두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ㄴ.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제도이다.

ㄹ.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모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이다.

### 07 비례 대표제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실시된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당	득표율(%)	의석수 계산	의석수(석)	의석률(%)
A당	4	$4/100 \times 5 = 0.2$	0	0
B당	36	$36/100 \times 5 = 1.8$	2	40
C당	20	$20/100 \times 5 = 1$	1	20
D당	40	$40/100 \times 5 = 2$	2	40

**정답 찾기** ⑤ B당은 정당 득표율 36%, 의석률 40%로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으며, D당은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이 40%로 동일하다.

**오답 피하기** ① A당의 정당 득표율은 4%의 득표율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A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② A당은 0석으로 A-1은 낙선되었다.

③ B당은 2석으로 B-1 후보자, B-2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④ C당은 1석, D당은 2석으로 D당이 C당보다 1석 더 획득하였다.

### 08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질문 1]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하나요?’에서 A는 B, C와 다른 답변을 하였으므로 1인 1표를 행사하는 A는 대통령 선거이고, 1인 2표를 행사하는 B와 C는 국회 의원 선거 또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임을 알 수 있다. [질문 2]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인가요?’에서 B는 A, C와 다른 답변을 하였으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인 B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이고, C는 국회 의원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③ 국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②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이다.

④ 국회 의원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 모두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적용한다.

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국회 의원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74~77쪽			
1 ④	2 ①	3 ④	4 ④		
5 ③	6 ④	7 ①	8 ⑤		

### 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선거의 기능에는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 통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여론 형성 및 반영, 정치 교육의 장(場) 제공, 주권 의식 향상 등의 기능이 있다.

**정답 찾기** ㄱ. (가)에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 후 주민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는 대화 내용을 통해 주권 의식을 높이는 선거의 기능을 알 수 있다.

ㄷ. (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진 공약을 실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당선자의 발언 내용을 통해 시민의 요구와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거의 기능을 알 수 있다.

ㄹ. (라)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존 대표자를 선거에서 다시 지지하지 않아 선거 결과 대표자가 교체되었다는 대화 내용을 통해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선거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나)에서 선거 결과 ○○시장으로 당선되어 지역

대표로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기능을 알 수 있으나, 유권자에게 정치 교육의 장(場)을 제공하는 기능은 알 수 없다.

## 2 민주 선거 원칙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인 보통 선거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민주 선거 원칙 중 보통 선거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① 인종과 종교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오답 피하기** ②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③ 선거구 간에 인구 편차가 허용 한계를 넘었을 경우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④ 투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⑤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면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 3 선거구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국 현행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개편안 적용 시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 현행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표)

구분	A당 후보	A당 후보	B당 후보	B당 후보	C당 후보	D당 후보
	-가	-나	-가	-나		
선거구1	60	20	30	25	50	15
선거구2	5	60	25	35	30	45
선거구3	45	50	35	10	20	40

○○국은 현행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 4석, B당 0석, C당 1석, D당 1석의 결과를 얻었다.

〈○○국 개편안 적용 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표)

구분	A당	B당	C당	D당
선거구1(1-1동)	50	10	30	10
선거구2(1-2동)	30	45	20	5
선거구3(2-1동)	25	35	20	20
선거구4(2-2동)	40	25	10	25
선거구5(3-1동)	60	5	20	15
선거구6(3-2동)	35	40	0	25

○○국은 개편안 적용 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 3석, B당 3석, C당 0석, D당 0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현행은 사표가 290표, 개편안 적용 시 사표가 330표가 발생하여 현행은 개편안 적용 시보다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ㄹ. 현행에서 B당은 0석, C당은 1석, D당은 1석이며, 개편안 적용 시 B당은 3석, C당은 0석, D당은 0석이다. 따라서 개편안 적용 시 현행 선거에 비해 B당은 유리하고, C당과 D당은 불리하다.

**오답 피하기** ㄱ. 현행은 3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중·대선거구제이다. 개편안 적용 시 6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이다.

ㄷ. 현행에서 A당은 4석이므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만, 개편안 적용 시 3석이므로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기 어렵다.

## 4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그림의 첫 번째 질문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선거는 국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A는 대통령 선거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적용되는 선거는 국회 의원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B는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④ (가)에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는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인가?'가 들어가면, D는 국회 의원 선거이고, C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이다.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선출한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능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은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②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이다.

③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지방 선거에 해당한다.

⑤ (가)에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가?'가 들어가면, D는 국회 의원 선거이다. 국회 의원 선거에서 지방 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다.

## 5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 분석** ◇◇국 현행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 현행 대통령 선거 결과〉

(단위: 표)

구분	1차 집계	2차 집계	3차 집계	비고
갑	4,000	4,200	4,900	
을	3,500	3,900	5,100	당선
병	1,600	1,900		
정	900			

**정답 찾기** ㄷ. 최근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자는 3차 집계 결과가 이 당선되었으며, 개편안은 1차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갑이 당선된다.

ㄹ. 현행은 과반의 득표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집계하는 선호 투표제로서 절대다수 대표제이며, 개편안은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가 당선되는 방식의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오답 피하기** ㄱ. 최근 실시한 선거는 3차 집계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ㄴ. 현행과 개편안 모두 유권자의 총투표 횟수는 한 번으로 동일하다.

### 6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선거 관리 위원회의 이해

**문제 분석**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은 선거 관리 위원회, 법률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제도는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는 선거 공영제이다. 따라서 A는 선거 관리 위원회, B는 선거구 법정주의, C는 선거 공영제이다.

**정답 찾기** ㄱ.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 관리 외에 정당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ㄴ. 선거구 법정주의는 법률로 선거구를 확정하여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기여한다.

ㄷ. 선거 공영제는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에 기여한다.

**오답 피하기** ㄴ.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7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국의 현행 지역구 의원은 6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비례 대표 의원은 전국 단위로 9명을 선출하고 있다. 개편안에서 지역구 의원은 재획정된 3개 선거구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변함이 없다. 현행, 개편안 모두 지역구 의원은 6명, 비례 대표 의원은 9명으로 동일하다.

**정답 찾기** ① 개편안에서 선거구(가, 나, 다), 선거구(라,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하는 방안과 선거구(나, 다, 라), 선거구(가,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하는 방안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② 현행은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개편안은 한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③ 현행, 개편안 모두 지역구 의원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현행 선거에서는 선거구 간에 유권자의 인구 편차가 최대 200명인데, 개편안 적용 시에는 선거구 간 유권자가 300명으로 동일하므로 현행에 비해 선거구 간 유권자의 인구 편차가 줄어들었다.

⑤ 현행, 개편안 모두 전국 단위의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8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국 현행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개편안 적용 시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 현행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단위: 표)

정당 \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가	30	40	10	20
나	20	10	30	40
다	30	40	20	10
라	10	40	30	20
마	80	30	70	20
바	120	20	60	100

정당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 계산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A당	2	200/900 × 9=2.0	2	4
B당	3	450/900 × 9=4.5	5	8
C당	0	130/900 × 9=1.3	1	1
D당	1	120/900 × 9=1.2	1	2

〈☆국 개편안 적용 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1. 선거구(가, 나, 다), 선거구(라,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한 경우  
• 지역구 의원

(단위: 표)

정당 \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가+나+다	80	90	60	70
라+마	90	70	100	40
바	120	20	60	100

정당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A당	3	2	5
B당	1	5	6
C당	1	1	2
D당	1	1	2

2. 선거구(나, 다, 라), 선거구(가,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한 경우  
• 지역구 의원

(단위: 표)

정당 \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나+다+라	60	90	80	70
가+마	110	70	80	40
바	120	20	60	100

정당	지역구 의석수(석)	비례 대표 의석수(석)	총의석수(석)
A당	2	2	4
B당	1	5	6
C당	2	1	3
D당	1	1	2

**정답 찾기** 나. B당 의회 의원수는 현행에서 8석, 개편안에서 6석이다. 따라서 B당은 개편안에서 현행과 달리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다. 개편안 적용 시 C당은 선거구(가, 나, 다), 선거구(라,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하였을 경우 지역구 의석은 1석, 선거구(나, 다, 라), 선거구(가,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하였을 경우 지역구 의석은 2석이다. 따라서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의 획정 방식에 따라 C당의 지역구 의석은 최소 1석, 최대 2석을 얻을 수 있다.

르. D당은 현행 의원 선거에서 2석, 개편안에서 선거구(가, 나, 다), 선거구(라,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하였을 경우와 선거구(나, 다, 라), 선거구(가, 마), 선거구(바)로 재획정하였을 경우에 모두 2석을 얻는다. 따라서 현행, 개편안 모두 D당의 총의석수는 동일하다.

**오답 피하기** 가. A당은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각각 2석을 얻었다. 따라서 현행에서 A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같다.

##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83쪽

01 ㉔

02 ①

03 ⑤

04 ③

### 01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㉔~㉖이 정치 과정에서 투입, 산출, 정책 결정 기구, 정치 주체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 찾기** 가. 국회는 입법부이고, 교육부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 정책 결정 기구이다.

다. 청원은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정책을 요구하는 투입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나. △△ 시민 단체가 환경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르. 개인, 집단 모두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한다.

### 02 정치 과정 및 정치 참여 사례의 이해

**문제 분석** (가), (라)는 개인적 정치 참여, (나), (다)는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하며, (가)~(라)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① 갑은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므로 (가)는 갑의 개인적 정치 참여로 공무 담임권 행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나)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③ (다)는 매달 정기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특정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가)에 비해 정치 참여의 지속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와 (라)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⑤ (다)는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고, (라)는 유권자로 투표를 하는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 03 정당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국의 t대와 t+1대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서 t대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A당, B당 2개의 정당으로 의회가 구성되었고, t+1대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A당~D당 4개의 정당으로 의회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이다.

**정답 찾기** 갑: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다.

을: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당할 우려가 높다.

정: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오답 피하기** 병: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

이하다.

#### 04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정답 찾기** ③ 정당은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은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b>수능 실전 문제</b>		본문 84~87쪽	
1 ④	2 ①	3 ④	4 ③
5 ④	6 ②	7 ④	8 ②

#### 1 일반적인 정치 과정 이해

**문제 분석** 그림은 이스턴(Easton, D.)의 정치 과정의 체계로, 정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는 문항이다. 제시된 정치 과정을 통해 A는 투입, B는 산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갑: 정책 결정 기구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포함된다.

을: 개인과 집단 모두 정치 주체에 해당한다.

병: 정당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정: 국가 기관에 요구 사항을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는 청원으로 정치 과정에서 산출이 아닌 투입에 해당한다.

#### 2 정치 과정의 사례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공직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정치 과정 사례이다. ㉠, ㉡은 정치 참여 주체, ㉢은 투입, ㉣은 정책 결정 기구, ㉤, ㉥은 산출로 볼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고등학생 갑은 정치 참여 주체로 1인 시위를 통해 개인적 정치 참여를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는 입법부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③ 공직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④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⑤ 제시된 자료에는 공직 선거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환류가 나타난다.

#### 3 정치 참여 방법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갑과 을은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교사가 두 명의 학생은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법, 한 명의 학생은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병은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시민 단체를 통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온라인을 통해 국민 정책 참여 게시판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공직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온라인을 통해 국민 참여 게시판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 모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지속적인 정치 참여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③ 갑과 을 모두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⑤ 특정 사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에 해당한다.

#### 4 정당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에서 여론 형성 및 조직화, ㉡에서 정치 사회화, ㉢에서 정치적 충원, ㉣에서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복지 정책 이해> 강연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다. 국회 의원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대표자 배출로 정당의 정치적 충원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환경 관련 정책 의견 수렴으로부터 정당의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르. 당정 협의회 개최로부터 정당의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 5 정당 제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당제, B는 경쟁할 수 있는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존재하므로 양당제, C는 경쟁할 수 있는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므로 다당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다당제는 양당제와 달리 세 개 이상의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서 다당제일 경우에 과

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 오답 피하기** ① 복수 정당제는 양당제와 다당제인 B와 C이며, 일당제는 A이다.  
 ② 일당제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③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어렵고 독재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제도는 일당제이다.  
 ⑤ 다당제는 일당제와 양당제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 6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이해

**문제 분석** [질문 1] ‘특수 이익보다 공익 추구를 우선시하는가?’에서 A는 B, C와 다른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A는 이익 집단, 공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집단 B와 C는 정당 또는 시민 단체이다. [질문 3]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에서 B는 A, C와 다른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인 B는 정당이고, A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 정답 찾기** ② 정당은 공식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④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7 언론의 특징과 기능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TV 토론회 시청, 을은 독자 투고, 병은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 참여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④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은 갑의 TV 토론회 시청, 을의 독자 투고를 하는 정치 참여 방법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환경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TV 토론회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② 을은 독자 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한다.  
 ③ 병은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⑤ 갑~병 모두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으로 시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

### 8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의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는 자발적으로 모이고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시민 단체, B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 C는 OO 업체 사업에 참여한 상인회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익 집단, D는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정당은 정강 실현을 위해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이익 집단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③ 시민 단체와 언론 모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④ 언론, 이익 집단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다.

## 수능 감(感)잡기

감을 잡으면 수능이 두렵지 않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III 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88~89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③

01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갑국에서 ○○ 시민 단체가 환경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정책을 반영 및 시행하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 시민 단체가 보완된 정책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정치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정책안을 제안’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하고, ‘□□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민 단체는 정치 과정에서 정치 주체에 해당한다.

③ 정치 과정에서 투입, 산출 모두 경제, 사회, 문화 등 정치 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④ ‘다양한 평가’는 환류에 해당하며,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환류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보완된 정책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하며, 환류, 투입 모두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02 정치 참여 방법의 이해

**문제 분석** ㉠은 선거를 통한 개별적 정치 참여, ㉡, ㉢은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 ㉣은 동물 보호 단체를 통한 집단적 정치 참여이다.

**정답 찾기** 나.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는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리. 동물 보호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는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와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대의제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다.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는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03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답 찾기** ①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이익 집단은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갖지 않는다.

③ 정당은 시민 단체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04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한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지역구 의석수	1석	2석	2석	1석	0석
비례 대표 의석수	2석	4석	0석	2석	1석
총의석수	3석	6석	2석	3석	1석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선거구 1-2	A당에서 2명 당선될 경우	2석	0석	0석	0석	0석
	A당에서 1명 당선될 경우	1석	1석	0석	0석	0석
선거구 3-4	1석	0석	1석	0석	0석	
선거구 5-6	C당에서 2명 당선될 경우	0석	0석	2석	0석	0석
	C당에서 1명 당선될 경우	0석	1석	1석	0석	0석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C당이 최소 의석을 확보한 경우〉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총의석수 할당 결과	3석	6석	1석	3석	2석
지역구 의석수	2석	2석	2석	0석	0석
비례 대표 의석수	1석	4석	0석	3석	2석
총의석수	3석	6석	2석 (1석 초과)	3석	2석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선거에서 A당과 C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한 경우〉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총의석수 할당 결과	3석	6석	1석	3석	2석
지역구 의석수	3석	0석	3석	0석	0석
비례 대표 의석수	0석	6석	0석	3석	2석
총의석수	3석	6석	3석 (2석 초과)	3석	2석

**정답 찾기** ③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경우 선거구 5-6에서 최소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1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여 총 2석을 획득하고, 최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2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여 총 3석을 획득하게 된다.

**오답 피하기** ① 현행 선거 제도에서 A당의 총의석률과 정당 투표 득표율은 각각 20%로 같다.

② 현행 선거 제도에서 D당은 지역구 의석수는 1석, 비례 대표 의석수는 2석을 획득하여 비례 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보다 많다.

- ④ 개편안 적용 시 B당이 최대 의석수 2석을 확보하여도 B당에 할당된 의석수 6석보다 적기 때문에 B당의 초과 의석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A당의 경우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총 3석을 획득하고 개편안 적용 시 선거구1-2에서 최대·최소 의석을 확보하여도 총의석수는 동일하게 3석이므로 선거 제도 개편안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반면에 E당의 경우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총 1석을 획득하고 개편안 적용 시 총 2석을 획득하므로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09 민법의 기초

### 수능 기본 문제

본문 95~96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①	06 ③	07 ④	08 ②

### 01 공법과 사법의 이해

**문제 분석** 국가 또는 공공 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는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인 A는 공법이다. 사인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인 B는 사법이다.

**정답 찾기** ⑤ 공법에는 헌법, 형법 등이 있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 ㉡에 각각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은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하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②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은 개인과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인 형법에 의해 규율된다.

③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가족 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이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은 사법인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④ 헌법은 개인과 국가 기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한다.

### 02 민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원칙, 재산 관계, 가족 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찾기** ① 법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의 형벌이 가해지는 법은 사법인 민법이 아니라 공법인 형법이다.

**오답 피하기** ②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은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④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⑤ 개인이 소유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0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인 A는 사적 자치

## 수능특강 Light

수능 영어 대비를 Light 하게!  
수능특강을 풀기 전  
가볍고 부담 없이 시작하자

의 원칙이고,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인 B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며,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인 C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ㄴ.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이는 개인의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ㄷ.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모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

**오답 피하기** ㄱ.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ㄸ. 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함께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 04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가)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나)가 반영된 법 조항은 토양 환경 보전법 제10조의3으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ㄱ.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ㄷ.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ㄴ. 제조물 책임,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모두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ㄸ.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 05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계약)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ㄱ.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ㄴ.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

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 계약은 무효이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ㄷ. 현대 사회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지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개인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근대 민법의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 06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별장을 지은 후 별장을 철거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소송 진행 중에 도시 계획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에 의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⑤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07 계약 공정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A 기관은 공정 거래 위원회인데, (가)에 근거하여 ○○ 회사가 소비자 및 서비스 이용 약관 조항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유턴할 경우에는 후행 자전거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④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 회사가 소비자 및 서비스 이용 약관 조항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시정하였다. 법원은 갑이 입은 손해가 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인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에는 계약 공정의 원칙, (나)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들어간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08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인해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따라서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B는 사적 자치의 원칙, C는 계약 공정의 원칙, D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②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 간의 법률관계 형성에 국가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③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된다.

④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불합리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원칙이 나타나게 되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97~99쪽

- |     |     |     |     |
|-----|-----|-----|-----|
| 1 ③ | 2 ② | 3 ③ | 4 ② |
| 5 ④ | 6 ⑤ |     |     |

### 1 공법과 사법의 이해

**문제 분석**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고, 개인과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다. 헌법, 형법은 공법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법인 형법, 형사 소송법이 적용된 사례이다. 1명만 제외하고 모두 옳게 답했으므로 A법은 사법이고, B법은 공법이며,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나.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은 민법이고,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다.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법이 적용된 사례이고,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가. 옳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은 을이다.

리.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은 사회법이다.

### 2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토지 안에 있는 도로가 일반 대중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지방 자치 단체에 도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답 찾기** 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가 인정되는 본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갑이 도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 것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해서이다.

**오답 피하기** 나.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소유권 행사의 제약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갑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리.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지방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다.

### 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원칙인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고,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인 B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며, 위법한 행위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인 C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③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 수익, 처분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들어갈 수 있다.

②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불합리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④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4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은 갑과 연예 기획사가 맺은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공정 거래 위원회는 A 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과 공정 거래 위원회는 모두 계약 공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 5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고, 각 원칙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정답 찾기** ④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르며,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에는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있다.

②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이유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③ A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면, D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계약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

⑤ C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면, F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상대적 권

리이다.

#### 6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은 ○○ 건설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소음과 진동을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소음과 진동이 갑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정답 찾기**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10 재산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05~106쪽

- |      |      |      |      |
|------|------|------|------|
| 01 ④ | 02 ④ | 03 ② | 04 ② |
| 05 ② | 06 ④ | 07 ⑤ | 08 ① |

## 01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

**정답 찾기** ㄱ.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과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 간 합의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 즉 계약이다.

ㄷ.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ㄹ.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02 계약의 성립 이해

**문제 분석**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

**정답 찾기** ㄴ.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이고, 을이 이에 동의한 것은 청약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다. 따라서 (나)에 을의 승낙이 나타나 있다.

ㄹ. 갑은 돈을 갚기로 한지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이는 채무 불이행이다. 을은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이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이 아니다.

ㄷ.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의 합치는 (나)에서 이루어졌다.

## 0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

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돈의 사용과 같이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갑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용돈을 모아 운동화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갑 또는 갑의 부모는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는 용돈의 처분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갑 또는 갑의 부모는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병은 고가의 태블릿 PC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구매하였으므로 병은 태블릿 PC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은 고가의 태블릿 PC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구매하였으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태블릿 PC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정은 태블릿 PC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철회권, 확답을 촉구할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04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등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측의 속임수로 인한 계약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을 배제하기도 한다.

**정답 찾기** 갑: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어야 한다.

병: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거래 상대방이 성인으로 믿게 한 경우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을: 거래 상대방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05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갑의 행위에 대해 구조가 시급히 필요한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을은 행위 당시 중증 정신 장애를 갖고 있어 심신 상실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을이 해당 행위를 했을 당시에 심신 상실자여서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을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찾기** ㄱ. 법원은 갑의 가해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ㄷ. 법원은 을이 행위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심신 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으며, 책임 능력이 없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ㄴ.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례에서는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ㄹ.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사례에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06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 이해

**문제 분석** 갑, 을, 병은 함께 불장난을 하다가 정 소유의 산에 있는 나무를 태워 정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책임 능력 유무에 따라 갑, 을, 병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갑은 책임 능력이 있는 성인이고, 을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고, 병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다.

**정답 찾기** ④ 병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정은 병의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정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정은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정은 을의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갑, 을, 병의 행위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책임 능력이 있는 갑, 을과 달리 병의 경우에는 병의 감독 의무자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인 정은 갑 또는 을에게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게 할 수도 있고, 가해자 측에 균등하게 손해액을 배상하게 할 수도 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07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해

**문제 분석**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를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고 한다. 사례에서 법원은 피용자인 D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C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ㄴ. 법원은 B가 입은 손해에 대해 B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C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용자인 D가 불법 행위를 하여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ㄹ. 피용자인 D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C의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ㄱ. A는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A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다.

## 08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이해

**문제 분석**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사례에서 법원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갑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ㄱ. 공작물 등의 점유자는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므로 갑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을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ㄷ.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갑과 을이 병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병이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을 것이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07~110쪽

1 ②	2 ②	3 ③	4 ②
5 ②	6 ④	7 ③	8 ③

## 1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 사례의 계약서를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1년 후에 원금 5백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채권자인 것이다.

**[정답 찾기]** ㄱ. (가)에서 갑은 을에게 5백만 원을 1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이는 갑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의 한 것이다.

ㄷ.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가)에서 갑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였고, 을은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을 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하였다. (나)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지만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ㄴ. 계약이 성립하면 양 당사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다)에서 갑은 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고, 을은 돈을 줄 의무를 이행하였다.

## 2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면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갑, 을, 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 가능 여부, 철회권 및 확답을 촉구할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찾기]** ② 을은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였고 거래 상대방인 정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을과 을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를 행사할 수 없다. 병은 정에게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하였고, 정은 병을 성년자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병과 병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를 행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은 부모의 동의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갑의 부모와 달리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 병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거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어야 한다. 거래 당시 정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병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 그러나 병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은 갑과의 계약, 병과의 계약 모두에 대해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3 무효와 취소 이해

**[문제 분석]**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취소가 가능한 행위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속임수, 협박, 강요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교사가 3명만 옳게 답했다고 하였으므로 A는 무효, B는 취소이며, (가)에는 옳지 않은 답변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ㄱ.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 갑, 을, 정이다.

ㄷ.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4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 관계, 책임 능력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답 찾기]** ②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실은 행위자가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A는 운전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앞차와 부딪혔으므로 A의 가해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

**[오답 피하기]** ①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해야 한다. A의 행위로 B의 차량이 훼손되고 B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A의 행위는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③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A의 가해 행위로 B의 차량이 훼손되고 B가 상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④ B가 입은 손해는 A의 가해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A의 행위와 B가 입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하며, 사례에서 A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5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유무에 따라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특

수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다면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 의무자만 특수 불법 행위인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정답 찾기**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피해자는 미성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미성년자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A의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A의 감독 의무자가 지는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 6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해

**문제 분석**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사례에서 피용자인 갑은 배달 중 과실로 정을 치어 다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을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갑의 사고로 인해 출장 뷔페 예약이 이행되지 못했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을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정답 찾기** ㄱ. 병과 달리 정은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병과 달리 정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병과 달리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병과 정은 모두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7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이해

**문제 분석** 법원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해당 발코니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으며,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건물의 점유자인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답 찾기** 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사례에서는 법원이 점유자인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ㄷ.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병에게 일부인 30%의 책임만 인정하는 것은 나머지 책임은 피해자인 갑에게 있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ㄱ.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작물 등의 소유자인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병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ㄷ.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병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면책될 경우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다.

## 8 동물의 점유자 책임 이해

**문제 분석** 사례에서 법원은 갑의 손해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동물의 점유자인 을과 불법 주차를 한 병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을에게는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정답 찾기** ③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따라서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였다면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② 법원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④ 손해 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 11 가족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16~117쪽

- |      |      |      |      |
|------|------|------|------|
| 01 ② | 02 ④ | 03 ④ | 04 ② |
| 05 ③ | 06 ① | 07 ④ | 08 ④ |

## 01 법률혼, 사실혼의 이해

**문제 분석**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 신고를 한 상태를 법률혼이라고 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따라서 A는 법률혼, B는 사실혼이다.

**정답 찾기** ㄱ.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간 상속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ㄷ.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모두에서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오답 피하기** ㄴ.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모두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ㄹ.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배우자,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02 이혼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이혼 숙려 기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과정을 거치는 (가)는 협의상 이혼이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나)는 재판상 이혼이다.

**정답 찾기** ㄱ. 협의상 이혼 시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다.

ㄴ.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ㄷ.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ㄹ.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발생한다.

## 03 친자 관계의 이해

**문제 분석**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는 친생자로 혈연관계의 자녀인 반면 친양자가 아닌 양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자녀이다. 친생자 중 혼인 중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혼인 외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따라서 A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 B는 혼인 외 출생자, C는 혼인 중 출생자이다.

**정답 찾기** ㄱ. 친양자가 아닌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이다.

ㄷ.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친양자가 아닌 양자는 모두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ㄹ. 혼인 중 출생자는 출생하면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인지 절차와 관련 있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이다.

## 04 친권의 이해

**문제 분석**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로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답 찾기**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혼 시 양육권을 갖는 부모와 친권 행사자인 부모가 다른 경우도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며,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신고로 부모의 친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 신고를 하면 성년 의제되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이다.

③ 친권에는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포함된다.

④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

⑤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어도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친자 관계는 친양자 입양 등에 의해 종료된다.

## 05 친양자의 이해

**문제 분석** 양자 제도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의제하는 제도이다. 양자에는 친양자와 친양자가 아닌 양자(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가 있다. 따라서 A는 친양자이다.

**정답 찾기** ③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병이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인 정, 무와 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오답 피하기** 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양부모인 갑, 을은 병에 대한 친권을 갖는다.

② 양자는 양부모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친양자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와 달리 친생부모의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④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참고로 친양자

가 아닌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⑤ 친양자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와 달리 입양 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 06 유언의 이해

**문제 분석**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언자가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며, 사망한 자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ㄱ. 상속의 대상에는 사망한 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ㄴ.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에 따른다.

**오답 피하기** ㄷ. 법정 상속의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 상속 재산의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공동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ㄹ. 유언의 방법에는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가 있다.

## 07 법정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갑과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며,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 만약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정답 찾기** ㄱ.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배우자 을과 직계 비속 병이 1.5 : 1의 비로 상속받게 되어 을이 6억 원, 병이 4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후 병이 사망하면 병의 재산 4억 원을 직계 존속 을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후 병이 사망하면 을이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ㄷ, ㄹ. 병이 사망하면 병의 재산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배우자 을과 직계 존속 정이 1.5 : 1의 비로 상속받게 되어 을이 6억 원, 정이 4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 피하기** ㄴ.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배우자 을과 직계 비속 병이 1.5 : 1의 비로 상속받게 되어 을이 6억 원, 병이 4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후 병이 사망하면 병의 재산 4억 원을 직계 존속 을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정은 법정 상속을 받지 못한다.

## 08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의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되 유류분을 고려해야 하며, 갑의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정 상속권자이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ㄴ.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갑의 재산 14억 원에 대해 배우자 을, 직계 비속 병, 직계 비속 정이 1.5 : 1 : 1의 비로 상속받게 되어 각각 6억 원, 4억 원, 4억 원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병과 정이 받는 법정 상속액의 합은 8억 원이다. ㄷ.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배우자 을, 직계 비속 병, 직계 비속 정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병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는다. 따라서 을은 병보다 더 많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은 갑이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유언장 작성일이 유언 효력 발생일이 아니다.

ㄷ. 유언이 없을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해 을, 병, 정이 법정 상속을 받게 되므로 직계 존속인 무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수능 실전 문제

분문 118~121쪽

1 ④	2 ⑤	3 ⑤	4 ③
5 ④	6 ④	7 ②	8 ⑤

## 1 혼인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가족법상의 합의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 혼인의 성립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고,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 가능한 연령에 해당할 것, 일정 범위의 근친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이다. (가)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혼인이고, (나)와 달리 (다)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A는 법률혼, C는 사실혼에 해당한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간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B의 혼인은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모두에서 부부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③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및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A는 (나) 사례, B는 (가) 사례, C는 (다) 사례에 해당한다.

## 2 혼인의 효과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은 계약이 없으면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는 부부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결정하였더라도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정답 찾기** 나. 부부 별산제에 따라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공유 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수익한다.

다. '자녀 학비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 행위인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 채무이다.

르. '혼인 후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진 빚'은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다.

**오답 피하기** 가. 일상 가사 대리권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된다.

### 3 이혼의 유형 및 효과 이해

**문제 분석** 이혼 의사 확인을 구하는 (가)는 협의상 이혼이고,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나)는 재판상 이혼이다.

**정답 찾기** ⑤ 협의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오답 피하기** ① 협의상 이혼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에서의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②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는 모두 이혼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혼의 효력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④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하다.

### 4 친자 관계의 이해

**문제 분석** (가)의 병은 갑과 을의 혼인 외 출생자이고, (나)의 병은 갑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므로 갑과 을의 친양자이며, (다)의 병은 성인인데 입양되었으므로 친양자가 아닌 양자이다.

**정답 찾기** 나.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양자 입양 후 병은 정미의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다.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가. (가)의 경우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낳았으므로 병은 갑과 을의 혼인 외 출생자이다.

르.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와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인지 절차와 관련 있는 경우는 혼인 외 출생자일 경우이다.

### 5 친권의 이해

**문제 분석** ○○ 지방 검찰청이 미성년 자녀 갑을 폭행하고 학대한 부모 을과 병의 상실을 청구한 A는 친권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인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찾기** 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이다.

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법원이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르. 친권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6 법정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상황1>, <상황2> 모두에서 갑과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배우자 을, 병, 정이 1.5 : 1 : 1의 비로 상속받고, 병이 사망하면 병의 재산을 갑과 을이 1 : 1의 비로 상속받는다.

**정답 찾기** 가. <상황1>에서 정이 4억 원의 법정 상속을 받았다면, 을은 6억 원, 병은 4억 원의 법정 상속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가)에는 '14억 원'이 들어간다.

나. <상황1>에서 (가)에 '7억 원'이 들어가면, 을은 3억 원, 병은 2억 원, 정은 2억 원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병과 정이 받는 법정 상속액의 합은 을의 법정 상속액보다 1억 원 많다.

다. <상황2>에서 (나)에 '14억 원'이 들어가면, 갑과 을의 법정 상속액은 각각 7억 원씩이다.

**오답 피하기** 르. <상황2>에서 병이 사망하기 전에 을이 14억 원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면, 갑이 6억 원, 병이 4억 원, 정이 4억 원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나)에 '10억 원'이 들어가면, 병이 을의 사망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6억 원임을 알 수 있다.

### 7 유언의 이해

**문제 분석**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타인의 위조, 변조 등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법원은 자필로 작성한 갑의 유언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정답 찾기** 가. 유언의 효력은 유언장을 작성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다. 갑이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 이유는 법에 규정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나. 을의 형제자매는 갑의 자녀를 의미하므로 법정 상속 1순위이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 여부에 따라 물려받을 수 있

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는 법정 상속권자이다.

ㄹ.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갑의 자녀인 을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8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 사망 시 법정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반면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 사망 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정이 사망하면 정 재산에 대해 무, B가 1.5 : 1의 비로 법정 상속을 받는다. 따라서 무는 6억 원, B는 4억 원을 상속받아 무의 법정 상속액은 B보다 2억 원이 많다.

**오답 피하기** ①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갑과 을이 이혼했을 당시에 A는 미성년자였다. 따라서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무는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을 했으므로 병과 정이 이혼했을 당시에 B가 미성년자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병과 정은 B가 미성년자였다면 3개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② 친양자로 입양되었더라도 친생부모인 갑이 병과 혼인한 것이므로 갑과 A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B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③ A는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을과 친자 관계가 종료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④ 병이 유효한 유언을 남긴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 A, B이다. B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 IV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122~123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⑤

## 0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가해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 절대 원칙에 의하면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그 동물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따라서 동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02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인 갑은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인 병의 동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인 을은 상황에 따라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갑이 을로부터 노트북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 등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인 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갑이 노트북을 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하였더라도 법정 대리인인 병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거래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03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을이 A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손님 B에게 화상을 입힌 것은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고, 반려견이 행인 D를 물어 D가 다친 것은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창틀에 있던 화분이 떨어져 행인 E가 다친 것은 병의 책임 능력 유무에 따라 일반 불법 행위 또는 특수 불법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인정된다.

**[오답 피하기]** ②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을은 B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A는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A가 을의 사용자로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A는 면책되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D는 C가 아닌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병의 행위는 고의가 없었어도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 행위로 성립한다. 따라서 병은 E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04 가족 관계의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이후 갑과 혼인한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을과 혼인한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친양자가 아닌 양자는 입양으로 인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나, 친양자는 입양으로 인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정답 찾기]** ⑤ 각 자녀마다 성(姓)과 본(本)이 다를 수는 없다. 따라서 C가 정(姓)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B는 정(姓)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 [오답 피하기]** ①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으며,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 ② 병이 미성년자인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면 병은 A의 친권자가 된다.
  - ③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므로 A가 사망할 경우 을도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④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B가 사망할 경우 정은 갑과 달리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12 형법의 이해

수능 기본 문제

분문 131~132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7 ③	08 ③

### 01 형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자의적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 기능이고,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지키는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이다.

**[정답 찾기]** ②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국민의 권리에는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범죄인의 권리도 포함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보장적 기능, (나)는 보호적 기능이다.

- ③ 형법에 규정된 형벌과 보안 처벌은 모두 국가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형법은 개인적 보복을 금지한다.
- ④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⑤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 02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 등록 번호를 사용한 행위를 주민 등록법에 규정된 '허위의 주민 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A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성문 법률주의(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②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④ 적정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3 형벌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자격 정지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되는 형벌이며, 명예형에 해당한다. 금고는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집행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며, 자유형에 해당한다. 징역은 1개월 이상 교

정 시설에 수용되어 집행되고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는 형벌이며, 자유형에 해당한다.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며, 재산형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⑤ 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만 선고받았으나, 병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과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선고받았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이 선고받은 자격 정지는 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② 갑이 선고받은 자격 정지는 명예형으로 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③ 을이 선고받은 금고는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④ 병이 선고받은 징역과 몰수는 모두 형벌에 해당한다.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에는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수감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이 있다.

#### 04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갑국의 형법 일부 조항을 통해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파생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나)에 규정된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한 것으로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소지가 있다.

다. (다)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 (라)에서는 아동을 학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 학대보다 동물 학대에 대해 더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가. (가)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법규를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다.

르. (나), (다), (라)는 모두 성문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 05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A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B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C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D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정답 찾기** 다. 자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회사의 업무

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C의 사례에 해당한다.

르.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자의 위법한 행위는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D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가. 화재가 발생한 호텔을 긴급히 탈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호텔 출입문을 파손한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므로 B의 사례에 해당한다.

나.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D의 사례에 해당한다.

#### 06 위법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이해

**문제 분석**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A에 대해 두 사람만 옳은 대답을 했다는 교사의 말을 통해 A를 파악할 수 있다. 객관적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은 위법성을 의미하며,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A는 위법성이다.

**정답 찾기** ④ 갑은 위법성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고, 병은 위법성 조각 사유인 긴급 피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반면 을은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옳은 대답을 한 두 사람은 갑과 병이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위법성이다.

②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이다.

③ 형사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⑤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 07 형법의 의미와 형벌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관세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은 아니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징역과 구류는 자유형에 해당하고, 벌금과 과료는 재산형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나. 징역은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다. 벌금과 과료는 모두 재산형에 해당한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부과한다.

**오답 피하기** 가. 관세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르.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되는 형벌이며 자유형에 해당한다.

### 08 보안 처분 이해

**문제 분석**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는 보안 처분이다.

**정답 찾기** ③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수강 명령은 모두 형벌이 아닌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심신 상실로 인해 책임이 조각된 경우 무죄가 선고되면서 치료 감호가 부과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②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보안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④ 형벌과 보안 처분 모두 적법 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 ⑤ 보안 처분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보다 장래의 위험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강조한다.

수능	<b>실전 문제</b>	본문 133~136쪽
1 ㉞	2 ㉠	3 ㉡
4 ㉢	5 ㉣	6 ㉤
7 ㉥	8 ㉦	9 ㉧

###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이해

**문제 분석**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 남용의 우려가 있었다. 반면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모두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 (가)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되는 반면,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된다.

### 2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가)~(다)의 내용을 통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찾기** ㉡. (나)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관이 자의적 해석에 의해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유추 해석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다)는 그것과 유사한 범죄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의하여 그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정한다고 하여 유추 해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답 피하기** ㉠. (가)는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 (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3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노동 쟁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며, 운동 경기 중 규칙에 따른 행동으로 상대방을 상해한 운동선수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 수 있다. 자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법령에 따른 노동 쟁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③ 피해자의 승낙은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⑤ ㉠, ㉡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고, ㉢은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 ㉡, ㉢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2개이다.

### 4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갑이 폐가와 쓰레기를 모두 불태우려 했으나 쓰레기만 태우고 폐가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건조물 방화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2심 법원은 이 사건의 폐가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물건에 해당한다며 물건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답 찾기** ⑤ 1심 법원은 폐가에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갑의 행위가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었다. 한편 2심 법원은 폐가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갑의 행위가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6개월 및 라이터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징역은 자유형, 몰수는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② 1심 법원은 폐가는 건조물이지만 폐가에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갑이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2심 법원은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2심 법원은 갑의 행위를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④ 2심 법원은 갑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5 형벌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표에 제시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징역, 금고, 구류, 과료를 구분해야 한다.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C가 징역이므로 A는 금고이다.

**정답 찾기** 나. C는 징역이므로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만, D는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이므로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 금고는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 따라서 ㉠은 '예', ㉡은 '아니요', ㉢은 '아니요'이다.

다. 징역을 제외한 금고, 구류, 과료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으므로 ㉣은 '아니요'이다. 따라서 ㉤과 달리 ㉥의 대답이 '예'라면, B는 구류, D는 과료이다.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납입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다.

**오답 피하기** 가.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로, 징역과 금고는 모두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라. A는 금고, C는 징역이므로 B가 과료라면 D는 구류이다. 구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

## 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학생1의 답안과 학생2의 답안 및 점수를 통해 범죄의 성립 요건 A를 파악해야 한다. 학생1의 답안의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학생2의 답안의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모두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이고, 세 번째 사례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⑤ (가)에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고, ㉠이 1점이라면, A는 위법성이다. A가 위법성이라면, 학생2의 답안 중

세 번째 사례만 옳은 내용이므로 ㉡은 1점이다.

**오답 피하기** ① 학생1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가 모두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이므로 ㉠에는 최대 1점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1점이라면, 세 번째 사례만 옳은 내용이므로 A는 위법성이다.

③ ㉡이 2점이라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옳은 내용이므로 A는 책임이다. 객관적 범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은 위법성이다.

④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이다. A가 책임이라면, ㉡은 2점이다.

## 7 대안적 형사 제재 수단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보호 관찰, (나)는 치료 감호, (다)는 사회봉사 명령이다.

**정답 찾기**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보호 관찰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 유예를 받거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② 치료 감호는 심신 상실로 인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부과될 수 있다.

④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과 같은 보안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때처럼 적법 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⑤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모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행위자의 사회 복귀 및 범죄 예방을 중시한다.

## 8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갑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이후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하 '보험 사기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법을 적용하여 갑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갑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갑의 행위에 대해 보험 사기 방지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한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⑤ 대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갑의 행위에 대해 보험 사기 방지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대법원이 사건을 ○○ 지방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2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고,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다.

② 1심 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법을 적용하여 갑에게 형벌을 선고

하였는데, 보험 사기 방지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지만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③ 1심 법원은 갑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또한 갑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벌금 미납 시 자유형의 성격을 가지는 형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산형과 자유형이 함께 부과된 것은 아니다.

④ 대법원은 갑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할 당시에는 보험 사기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갑의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42~143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③	07 ②	08 ②

### 01 수사의 의미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절차 중 하나로,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활동은 수사이다.

**정답 찾기** ② 수사는 고소(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나 고발(제3자)뿐만 아니라 현행범의 체포, 긴급 체포, 범인의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 개시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③ 공소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④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법관)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⑤ 수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02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이해

**문제 분석** 그림을 통해 갑은 징역 3년, 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병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모두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 을, 병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된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②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것은 가석방이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이다.

③ 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병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선고유예의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03 형사 재판 절차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재판 절차 중 모두(冒頭) 절차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 인정 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변호인의 모두 진술 등이 이루어진다. 사실 심리 절차에서는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구형) 및 피고인·변호

## 수능개념

EBS 대표강사들과 함께 하는  
수능의 개념을 잡아주는 필수 기본서

인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지며, 변론 종결 이후 판결이 선고된다.

**정답 찾기** ② 모두 절차에서 재판장은 인정 신문 전 갑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검사의 구형은 사실 심리 절차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며,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 갑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⑤ 갑은 기소되면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 04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갑, 을, 병은 모두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 사건의 대상이다. 갑은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며, 을과 병은 각각 기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둘 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형사 재판을 담당할 법원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을의 형사 재판을 담당할 □□ 지방 법원은 을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다. 검사는 병에게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오답 피하기** 가. 기소가 이루어진 형사 사건을 담당할 법원은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정 법원 소년부 판사는 비행 재발 방지, 소년의 환경 개선이나 교화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라. 병은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 05 국민 참여 재판 이해

**문제 분석** A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이다.

**정답 찾기** ④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 관할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민 참여 재판이 실시된다.

③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하므로 민법상 미성년

자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 국회 의원, 법관, 변호사 등은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⑤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1심을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실시되므로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고등 법원에서 2심 재판이 이루어진다.

#### 06 보석 제도와 가석방 제도 이해

**문제 분석**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는 보석 제도이고, 수형자가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는 가석방 제도이다.

**정답 찾기** ③ 가석방 제도를 통해 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 관할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 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오답 피하기** ① 보석 제도에서 구속의 집행 정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② 보석 제도를 통해 석방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④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무죄 재판을 받은 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이다. 가석방 제도를 통해 석방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⑤ 가석방 제도는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수형자를 석방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수형자의 태도 등이 양호하여 누워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 07 형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자료를 통해 갑이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고도소에 수감되어 10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찾기** ② 재판 절차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 재판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수사는 고소 또는 고발, 범인의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개시되며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④ 갑은 징역을 선고받았으므로 복역 기간 동안 갑에게 노역이 부과된다.

⑤ 재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에 법원이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08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배상 명령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이고,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는 배상 명령 제도이다.

**[정답 찾기]** ㄱ. (가)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나)는 배상 명령 제도이다.

ㄴ.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각 지방 검찰청에 있는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에서 관할 구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법원의 배상 명령은 범죄 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다.

ㄷ.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44~147쪽

- |     |     |     |     |
|-----|-----|-----|-----|
| 1 ④ | 2 ④ | 3 ③ | 4 ② |
| 5 ③ | 6 ② | 7 ⑤ | 8 ② |

### 1 형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은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갑은 징역 1년, 을은 징역 5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판 당사자들은 항소하였고, 2심 재판에서 갑과 을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답 찾기]** ④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재판 당사자이며, 검사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구속되기 전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을 거친다.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②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③ 갑과 달리 을에게는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집행 유예는 대안적 형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1심 재판을 □□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으므로 2심 재판은 □□ 지방 법원 합의부가 담당한다.

### 2 보석 제도와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가)는 피의자인 갑이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결정이고, (나)는 피고인 을에게 보석이 허가되는 결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을은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석방되었다. 보석 제도는 보증금의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되면 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자료에서 피의자 갑의 청구로 □□ 지방 법원이 갑의 석방을 명하였으므로 (가)는 갑의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③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이다. 1심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⑤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갑과 을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소매치기 수범의 범행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2017년 범행 당시 갑의 연령은 14세 이상이다. 또한 갑은 수범의 범행으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므로 2020년 범행 당시 갑의 연령은 19세 미만이다. 한편 2017년 범행 당시 갑의 연령은 14세 이상이었으므로 2023년 지갑을 절취할 당시 갑의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소년 사건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찾기]** ③ 소년부 판사는 갑에게 소년범상 보호 처분을 내렸다. 소년범상 보호 처분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2017년 소매치기 수범의 범행 당시 갑의 연령은 14세 이상으로 갑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

② 2020년 같은 수범의 범행 당시 갑의 연령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따라서 갑이 기소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고, 갑이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는 소년범상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 ④ 사회봉사 명령은 소년 사건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 ⑤ 2023년 1월 범행 당시 갑의 연령은 19세 이상이므로 갑은 소년 사건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갑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없다.

#### 4 형사 보상 제도 이해

**문제 분석** 변호사의 대답을 통해 (가)에는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 받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찾기** ㄱ.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ㄷ.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원판결(原判決)에 의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집행 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ㄹ.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미결 구금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5 형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자전거를 훔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갑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상황1>, <상황2>, <상황3>에 적용하여 옳은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정답 찾기** ㄴ. <상황2>에서 갑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심을 통해 갑이 무죄를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상황3>에서 갑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 기관이 갑을 구속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ㄱ.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 사건의 대상이다. <상황1>에서 갑은 소년 사건 대상이지만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갑이 항소하더라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2심 법원에서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

ㄹ. <상황3>에서는 <상황2>와 달리 갑이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므로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 6 형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자료를 통해 갑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갑은 금고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를 통해 을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을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갑은 금고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답 피하기** ① 금고는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징역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③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명예 회복을 위해 확정된 판결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을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④ 을의 항소심을 고등 법원이 담당하였으므로 을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다.

⑤ 갑의 1심 재판, 을의 2심 재판 모두 피고인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 7 배상 명령 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갑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 지방 법원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을의 신청을 받아들여 을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갑이 손해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이를 통해 을이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B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여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산 피해만 입은 사람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배상 명령, (나)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다. ② ○○ 지방 법원은 갑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다. 유예의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은 선고 유예이다.

③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④ A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B가 아니라 국가가 A에게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8 국민 참여 재판 및 형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된 갑의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1심 재판 결과 갑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고 갑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갑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으며, 2심 법원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갑의 무죄가 확정되면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찾기** 가. 사형은 생명형이고, 무기 징역과 징역 15년은 자유형이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 생명형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은 3명, 자유형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은 6명이므로 자유형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 수가 생명형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 수의 2배이다.

다.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 관할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오답 피하기** 나.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르.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 수사를 받았던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 14 근로자의 권리

###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51~152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 ⑤	08 ⑤

### 01 사회법의 등장 배경 이해

**문제 분석**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 빈부 격차 심화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는 사회법이다.

**정답 찾기** 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하는 제3의 법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법의 종류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등이 있다. 민법은 사법에 해당한다.

② 사회법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③ 사회법이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 규제 완화를 중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사회법은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 해결을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 02 부당 해고 사례 이해

**문제 분석** 갑은 ○○ 의류 회사 사용자로부터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갑은 해고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갑은 해고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당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이다. 해고의 절차에서 해고의 사유나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는 정당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④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의 구제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



의 효력을 다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03 근로 3권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근로자의 권리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설명한 자료이다. A는 단결권, B는 단체 행동권, C는 단체 교섭권이다.

**정답 찾기** ㄱ.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ㄷ.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ㄹ. 헌법에 규정된 근로 3권은 근로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오답 피하기** ㄴ. 근로 3권은 모두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갖는 권리이다.

### 04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으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성립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⑤ 부당 해고의 경우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으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② □□ 회사 사용자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은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으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 회사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친 후 중앙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05 연소 근로자의 근로 보호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7세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15세 이

상 18세 미만인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이 사용자 을과 체결한 근로 계약의 내용이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연소자 보호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④ 갑은 17세로 연소 근로자이다.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답 피하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소 근로자인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②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갑의 근로 시간은 7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1시간이므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취직 인허증은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의 자에게 고용 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이다. 갑은 17세이므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취직 인허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06 부당 해고 이해

**문제 분석** 부당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이다. 제시된 사례에서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는 해고의 경우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③ 경쟁 기업에 회사의 기밀을 넘겨줘서 서면으로 해고된 경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해고로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이자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②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④ 적법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한 부당 노동 행위이자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⑤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07 근로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서 질문자는 20세이므로 성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답변란에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 연소 근로자의 연장 근로 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성인 근로자

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③ 질문자는 20세로 성인이다.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08 근로 조건의 기준과 연소 근로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헌법 제32조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서 근로 조건의 기준과 연소자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다.

**정답 찾기** ⑤ 연소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이므로 이들의 근로는 성인 근로자와 구별하여 헌법과 근로 기준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성인 근로자와 달리 연소자의 연장 근로 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근로 기준법에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② 근로 조건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③ 연소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연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53~155쪽

- |     |     |     |     |
|-----|-----|-----|-----|
| 1 ② | 2 ④ | 3 ① | 4 ⑤ |
| 5 ③ | 6 ⑤ |     |     |

### 1 사회법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사회법의 종류 중 하나인 노동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은 사회법이다.

**정답 찾기** ② 사회법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한다.

**오답 피하기** ①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하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 ③ 노동법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 실현을 추구한다.  
 ④ 사회법의 한 종류인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⑤ 사회법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등장하였다.

### 2 근로 계약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사례1>은 18세인 근로자 A의 근로 계약 사례이고, <사례2>는 17세인 근로자 B의 근로 계약 사례이다. A와 달리 B는 연소 근로자이므로 <사례2>에서는 근로 계약의 내용이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연소자 보호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을과 B가 근무일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하면, B는 근무일 모두에 1일 1시간씩 더 근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을의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② 연소 근로자인 B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사장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18세인 A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7세인 연소 근로자 B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갑은 ○○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중앙 노동 위원회도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법원도 해고 과정에서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정답 찾기** ㄱ.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사례에서 ○○ 회사 사용자가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ㄴ. ○○ 회사 사용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갑에 대한 해고에 대해 중앙 노동 위원회는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였고, 법원 역시 갑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ㄹ.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

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 4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정답 찾기** ⑤ □□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당 해고이다.

② 부당 해고의 경우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회사 사용자는 ○○ 지방 노동 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하였다. 즉 ○○ 지방 노동 위원회는 □□ 회사 해고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의해 정당한 근로 3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판정하지 않았다.

#### 5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해

**문제 분석** 노사 관계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답 찾기** 나. 근로 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에 의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관한 각종 조건을 말한다.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다.

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대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기. 근로 기준법은 모든 근로자가 아닌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를 있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디. 근로자가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쟁의 행위 등을 통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행동권이다.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이다.

#### 6 근로 계약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사례에서 사업주 갑과 근로자 을의 근로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근로 계약의 내용이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⑤ 근로자 을은 28세로 성인 근로자이다. 따라서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짝수 달에 을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② 을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으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휴게 시간의 경우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을의 휴게 시간은 1시간으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을은 성인 근로자이므로 갑과 을이 합의를 하면 야간 근로가 가능하다.

④ 을이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을 일한다면 하루에 7시간을 일하게 된다. 을은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을 받으므로 하루에 70,000원을 받을 수 있다.

01 ②

02 ③

03 ③

04 ⑤

### 01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죄형 법정주의이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해당한다.

ㄴ.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적절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적용뿐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입법권 행사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법률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하는 모든 법 규범을 의미한다.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도 적용된다.

ㄷ. 형법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형법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도 수행한다.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므로 보장적 기능보다 보호적 기능의 우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 02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갑(12세)이 옆집의 반려견을 걸어차 다치게 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책임이다. 경찰관 을(30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범인을 체포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은 인정되나 정당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B는 구성 요건, C는 위법성이다.

**정답 찾기** ③ 구성 요건이 인정되는 행위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오답 피하기** ①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④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병(45세)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정(19세)에게는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정이 이유 없이 돌을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03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술에 만취한 병이 난동을 부리자 갑(24세)과 을(14세)이 이를 제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이 상해를 입었다. 갑과 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갑은 구속되었고, 검사는 갑을 기소하고 을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갑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답 찾기** ③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따라서 검사가 갑을 기소하여 개시된 재판에서 갑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② 기소 이후 갑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갑을 기소한 검사에게 있다.

④ 구속되었던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갑에게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갑이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4 연소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 분석** 연소자인 갑은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 계약서 내용을 통해 갑의 근무일은 1주에 5일(수요일~일요일)이며,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은 1일에 6시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을과 합의하에 토요일에 1시간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 기준  
법상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친권자나 후  
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친  
권자는 갑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나 고  
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근로자로 고용  
할 수 있다. 갑은 15세이므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지 않다.

③ 연소 근로자의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일  
요일을 반드시 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근로 계약  
내용처럼 수요일~일요일을 근무일로 정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은 친권  
자의 동의 없이 을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64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②

### 0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관점은 국제 관계를 윤리와 도덕 규범  
에 따라 상호 의존하고 공존하는 관계로 바라보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 국제법을 통해 국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입  
장이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  
화 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원리에 초점을 두고 국제  
관계를 설명하며, 국제 정치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  
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한다. 또한 홉스의 인간관에 기초하여 무정  
부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를 유일한 행위 주체로  
보지 않는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해서 국제  
관계에서 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잠  
재적인 공격자를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여러 세력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 02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A국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  
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제 연합(UN) 총회 투표에서 기권한 사  
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국제 관계의 특징  
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③ 제시문에서 ○○국이 안보에 대한 우려로 국제 연  
합(UN) 총회 투표에서 기권한 내용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  
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문에서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파악하기 어렵다.

② 제시문에서 국제 사회가 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  
되고 있음을 파악하기 어렵다.

④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제시문에서 국제 사회에서 이념 간 갈등보다 희소한 자원을 돌  
려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파악하기 어렵다.

###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까?’라는 질문에 B와 달리 A는 ‘예’라고 답하므로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이다. 또한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행위 원칙입니까?’라는 질문에 국제 관습법과 조약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므로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정답 찾기** ㄱ.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의 사례이다.  
 ㄴ. 국제 관습법, 조약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성립하는 국제법은 국제 관습법이다.  
 ㄷ.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행위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므로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 04 국제법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B국의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A국의 무차별적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제법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②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집행 기구가 없어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법 규범의 제정이 어렵다.

③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주로 문서의 형태로 체결되는 조약과 달리 국제 관습법은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내에서 국내법보다 국제법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헌법은 국내법에 해당한다.

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⑤ 모든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국제 협약 결의안을 채택한 내용을 통해 국제 사회는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문에서 국제법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음을 파악하기 어렵다.

② 제시문에서 국가 간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을 파악하기 어렵다.

③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제시문에서 국제 규범의 준수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 0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가) 관점은 국가들은 국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므로 국제 관계에서 국가들 간의 대립과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나) 관점은 국가 간 평화는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통해 실현될 수 있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ㄴ.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 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집단 안보는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체제 내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침략자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체제로서,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것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집단적 제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조화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ㄱ.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ㄴ.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은 모두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특징과 점수를 통해 A, B, C가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C의 특징에 대한 점수가 2점이므로 C는 국제 관습법임을 파악할 수 있다. A의 특징에 대한 점수가 2점으로 제시된 특징이 모두 조약의 설명이므로 A는 조약이고, (가)에는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B는 법의 일반 원칙이고, (나)에는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65~167쪽

1 ⑤	2 ③	3 ⑤	4 ②
5 ②	6 ②		

### 01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전 세계가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

**정답 찾기** ⑤ B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나)에는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진술은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A는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 상호 간 관계에서 최상위 규범인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②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C는 국제 관습법으로,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④ A는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등 주요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에는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진술은 들어갈 수 없다.

#### 04 조약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노동관계 국제 협약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조약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약은 대통령의 체결·비준과 필요시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국내법으로 수용된다.

**정답 찾기** ②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조약은 준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체결 당사자만을 구속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④ 우리나라에서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 상호 간 관계에서 최상위 규범인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다고 본다.

#### 05 국제 관계의 변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으로 양극 체제와 냉전 체제의 형성, (다)는 제3 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공산주의 진영의 다원화로 인해 다극 체제로의 전환, 냉전 체제의 완화, (라)는 탈냉전 시대의 개막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찾기** ㄱ.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의 체결로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ㄴ. 냉전 체제 완화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 대립보다 경제적 실리 추구가 중시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냉전 체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으로 형성되었으며, 제3 세계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과 냉전 체제의 완화를 초래하였다.

ㄷ. 냉전이 완화되던 시기에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06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 서술하는 답안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된다.’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의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서술이 아니다. 채점 결과가 4점이므로 ‘당사자 간의 명시적 수용 절차를 거쳐야 성립된다.’가 옳은 진술이고, (가)에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으로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이다.

**정답 찾기** ②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결합에 의해 성립된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에서 체결·비준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조약이다.

③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다.

④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이다.

⑤ (가)에는 국제 관습법과 구별되는 조약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제 관습법이다.

#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71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⑤

## 01 국제 문제의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제시문에 환경부가 아시아 국제 물 주간에 참가해 물 문제 해결과 물 분야 탄소 중립 실현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정답 찾기** ⑤ 제시문에서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의 경우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의 문제이자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하는 문제임이 나타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문의 국제 문제 해결에서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② 제시문에서 국제 문제 중 정치적·이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제시문에서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제시문에서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 02 국제 연합(UN) 헌장 분석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국제 연합(UN) 헌장의 일부 내용으로 국제 연합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찾기** ② 국제 연합은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③ 국제 연합에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총회이고, 국제 연합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은 안전보장 이사회이다.

④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 분쟁은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나 영토, 자원을 둘러싼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⑤ 국제 연합이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중앙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 03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사법적 해결, (나)는 외교적 해결이다.

**정답 찾기** ㄱ. 사법적 해결은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ㄷ. 사법적 해결과 외교적 해결은 모두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ㄴ. 외교적 해결의 한계로 종교 간 갈등 등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ㄷ. 사법적 해결과 외교적 해결은 모두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 활용이 가능하다.

## 04 우리나라의 시기별 외교 정책의 특징 분석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외교 정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70년대 외교 정책의 특징인 ㉠에는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1970년대는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한 시기로 ㉠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북방 외교의 시행 이후 공산권 국가와 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계기로 정치적 이념 중시 경향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시되었다.

② 1970년대는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로 우리나라는 공산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하였다.

③ 1989년 몰타 미·소 정상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냉전의 종식’이 선언되었고, 세계는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④ (라) 시기 이후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72~173쪽

1 ⑤

2 ②

3 ④

4 ②

## 1 국제 문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는 기후 위기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 국제 문제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경우 오염 물질의 발생 국가와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

**정답 찾기** ⑤ 환경 문제는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주며,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그 범위가 지구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국제 문제이다.

**오답 피하기** ① 환경 문제는 국가 간 이념과 체제 차이로 발생하는 국제 문제가 아니다.

② 국제 사회에서 오염 물질 발생 국가와 피해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개별 주권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은 아니다.

④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은 거리가 멀다.

## 2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A국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B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고려하는 것은 국제 문제의 해결 중 사법적 해결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정답 찾기**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다. 즉 강제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③ 외교적 해법에서도 국내 문제 불간섭에 따라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④ 종교 간 갈등과 같은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외교적 해결이 어렵다.

⑤ 외교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은 모두 국제법을 활용하여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3 국제 사법 재판소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국가 간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국제 연합(UN)의 사법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른 국가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

**정답 찾기** ④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제 연합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오답 피하기** ① 당사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 시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국가만이 재판 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며,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안전 보장 이사회 의사 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가)에 '양 당사국의 합의하에 분쟁 해결 요청'이 들어갈 수 있다.

## 4 국제 연합(UN)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국제 연합(UN)이 국제 평화 유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

사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평화 유지가 어려워진 점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②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경제·외교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연합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이다.

③ A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임을 알 수 있다.

④ A국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하나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 총회에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⑤ A국의 거부권 행사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수능 기출의 미래

두꺼운 분량을 벗어난 가장 완벽한 기출문제집  
쉬운 문항은 간략하고 빠르게,  
고난도 문항은 상세하고 심도 있게

01 ②

02 ④

03 ④

04 ③

### 0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②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협력 체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을 보편적 선이나 윤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관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④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협약과 국제 관습법을 통해 국가 간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은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답안 내용이 옳아야 한다. 따라서 A는 국제 관습법이고, B는 조약이며,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④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조약은 명시적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②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③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은 국제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⑤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우리나라에서 헌법보다 하위의 지위를 가진다.

### 0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총회이다.

**정답 찾기** ④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은 표결 시 주권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1국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오답 피하기** ① 조약은 국가 간에 주로 체결되지만 국가 외에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사건은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0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총회이다.

**정답 찾기** ③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데,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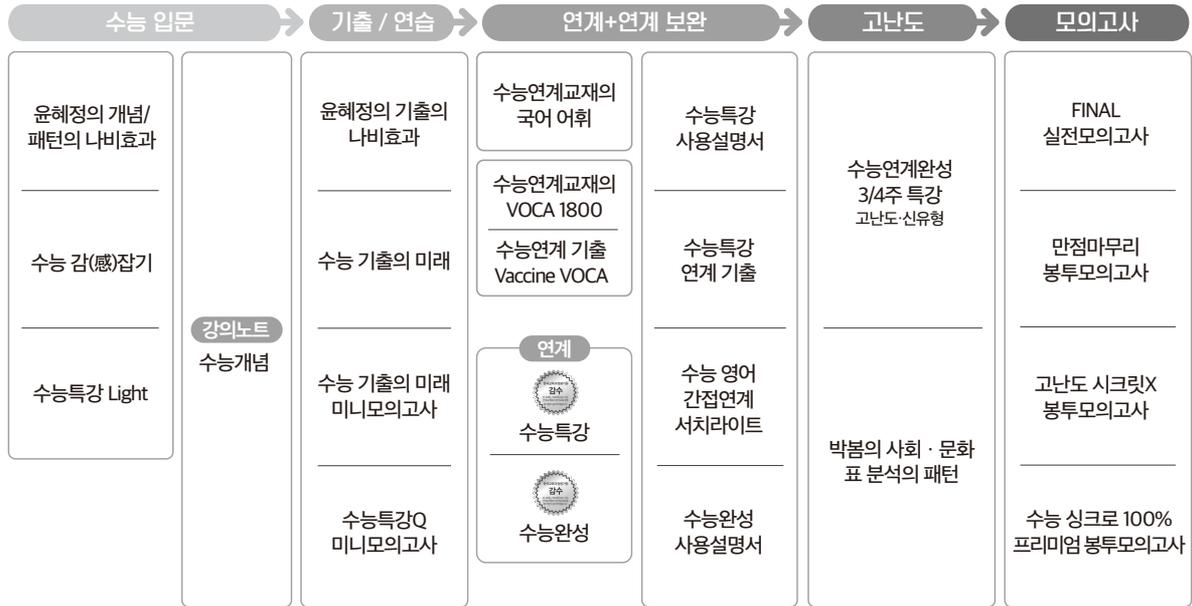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 보장 이사회와 달리 총회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MEMO**

# 고2~N수 수능 집중 로드맵



구분	시리즈명	특징	수준	영역
수능 입문	윤희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국어 개념/패턴 학습	●	국어
	수능 감(感)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	국/영
기출/연습	수능개념	EBSi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	전 영역
	윤희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꼭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	전 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부담없는 실전 훈련, 고품질 기출 미니모의고사	●	국/수/영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품격 미니모의고사	●	전 영역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자료·문항 분석	●	국/영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	국/영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	국/영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만 모아 구성된 간접연계 대비 교재	●	영어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 지문과 문항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서	●	국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	영어
고난도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킬러 문항 대비서	●	국/수/영/과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	사회탐구
모의고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동일 난도의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	전 영역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제대로 어려운 최고난도 모의고사	●	국/수/영
	수능 싱크로 100% 프리미엄 봉투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만나는, 수능과 가장 가까운 고품격 프리미엄 모의고사	●	국/수/영